



‘임금 체계 개편’은 더한층의 노동 착취일 뿐이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라

그리스 최신 상황과
위기 대안 논쟁

3~5 면

노동시장 구조개혁
현안 논쟁

6 면

국민연금
개혁 대안 논쟁

8~9 면

중국 경제 위기와
중국 노동자 투쟁

12~13 면

좌파적 개혁주의 정당에
대한 적절한 대처법

10~11 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불법이라는 박근혜 정부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박근혜 정부가 기어코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구속했다. 경찰이 7월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래군 운영위원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와 4·16연대에서 주도적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이끌어 왔다. 따라서 이번 구속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불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노동계급과 민중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이윤경쟁 체제의 수혜자들이 만든 비극이었다. 이런 자들과 유착된 박근혜 정부는 무책임한 대응은 사고를 참사로 키웠다.

세월호 참사에서 이미 유죄인 박근혜 정부에게 진실 규명 운동은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운동은 비극의 재발을 막으려면, 진실을 낱알이 밝히고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로 이 때문에 광범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참사 이후 5백 일이 다 되도록 박근혜 정부는 ‘내 아이가 죽은 이 유라도 알고 싶다’는 유가족들을 철저



몽처서 저항하자 지도부 탄압과 박래군 구속은 그동안 정부와 우익이 ‘순수’ 유가족과 좌익불순 외부 세력을 구분·분열시키려 해 온 것의 연장선이다.

히 외면하고 모욕했다. 진상 규명 특별법을 누더기로 통과시키더니, 시행령까지 쓰레기로 입법했다. 참사 1주기를 즈음해 항의가 재점화하자 유가족

과 집회 참가자들에게 최루액 대포를 쏘아대고 무더기 연행을 하더니, 이제 박래군 운영위원을 구속까지 한 것이다.

그러는 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예산 편성을 한 톨도 하지 않으며 알량한 조사권마저 마비시키려 했다. 여당 추천 몫 조

사위원인 조대환은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광화문 농성장도 위협 대상이다. 이 자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

경찰은 이미 5월에 박래군 운영위원 외에도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이태호(참여연대), 최영준(노동자연대) 공동 운영위원장 3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며 탄압을 예고했다.

바로 이런 행태들 때문에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주장이 호응을 얻어온 것이다.

따라서 진실 은폐의 주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손을 맞잡고 거리로 나선 것은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행동이다. 정부의 악랄하고 교활한 시도에 맞서는 데 앞장서 온 박래군 운영위원은 무죄다. 당장 석방돼야 한다.

3백4명을 수장시키기도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처벌돼야 한다.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을 석방하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주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2015년 7월 17일 노동자연대

민주주의와 진보적 교육 개혁 열망에 대한 공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무죄다

김인숙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올해 4월 법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백만 원 형을 받았다. 지난해 선거에서 고승덕 후보에게 ‘미국 영주권자의 흠을 해명하라’고 요구한 것에 허위 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것이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했고,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선거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이 사안을 주의경고로 종결 처분했다. 경찰도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이것은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이다. 1백90여 단체가 참가해 만든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 사안을 조 교육감에 대한 표적 기소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상 허위 사실 공표죄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많은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선거 기간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종성 호주국립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허위 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형법상의 명예 훼손죄와 모욕죄

를 선거 공간에 적용한 것이다.

그는 한국이 명예 훼손을 세계에서 가장 광범하게 정의하고 있고, 가장 가혹한 형벌 조항(최대 7년 징역형)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은 형사 처벌을 하고, 명예 훼손 형사 소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비판한다.

유엔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튀는 2011년 한국 보고서에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공표죄의 정치적 악용을 비판하면서 비형사 범죄화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게다가 조 교육감은 허위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제기한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고승덕 후보에게 해명하라고 했을 뿐이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 측이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 작업을 소홀히 했으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했다. 검찰도 재판 과정에서 3개월이나 걸려서 밝혀낸 것을 조 교육감 측이 선거 기간에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억지다.

그런데 7월 10일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무죄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유죄가 나오지 않도록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이 재판의 정치적 의의보다는 선거법 적용의 문제를 법리적으로 다루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삼는 듯하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에 속한 민병훈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선거법을 많이

담당한 선거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이것이 민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에 삼성에버랜드 전환 사채 헐값 발행 사건 1심 재판에서 삼성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조 교육감에 대한 재판은 정치 재판이고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허위 사실 공표죄는 빌미일 뿐이다. 따라서 재판부에 무죄를 분명하게 주장하는 것이 옳다.

진보 교육 흔들기

그런데 진보진영의 일부는 조희연 교육감 방어에 주저함이 있는 듯하다. 교육 개혁의 열망을 안고 당선한 조 교육감의 그간 행보에 대한 실망감 때문일 것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자사고 폐지 공약에서 후퇴했다. 또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후속 조치로 내린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과 직권면직 요구를 받아 들였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 것에도 제대로 맞서지 못했다.

후보 시절 공약한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도입도 예산이 없다며 지키지 않았다. 전교조와의 단체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전교조 서울지부가 실시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보면, 서울의 교사들은 조 교육감의 비리 척결, 학교

폭력 예방, 교육 복지, 학생 자치에서 70점 이상을 줬다. 그러나 사교육비 절감, 자사고 폐지, 학교 업무 정상화에서는 낙제점을 줬다.

그러나 조 교육감에 대한 공격은 조 교육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우파들은 진보 교육감을 끌어내려서 진보 교육을 향한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싶어 한다.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당선했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은 대체로 진보적인 경력과 정책으로 진보 표를 결집시킬 수 있었다.

조 교육감은 군사정권 시절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이후에도 진보 운동에 적극 관여해 온 지식인이다. 선거에서도 자사고 폐지, 혁신학교 확대,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 진보적 정책을 분명히 내세우고 당선했다.

진보 교육감들을 눈엣가시로 여겨온 정부와 우파들은 그동안 온갖 수단을 동원해 진보 교육감을 압박하고 흔들려 왔다.

선거법을 들이대 탄압하거나 시행령으로 교육감의 교육 개혁 무력화했다. 교육감이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러할 때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직무유기로 기소하기도 했고, 교육 재정을 차등 지급해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직선제를 폐지해 진보 교육감

의 등장을 막으려고 한다. 조 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자마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직선제 폐지의 본심을 드러냈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탄압은 민주적 권리와 진보적 교육 개혁에 대한 공격이다. 조 교육감을 방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한 공대위는 2심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조 교육감 방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조 교육감 2심 무죄 탄원 백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촛불집회를 열고 홍보물을 제작·반포하며 적극 알리고 있다.

민주주의와 진보 교육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에 맞서 조 교육감을 주저함 없이 방어해야 한다. 그런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조직해야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 등에 맞설 힘도 키울 수 있다.

조희연 교육감 2심 무죄 탄원 백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http://goo.gl/forms/GWH7AKY2Kw>

선고유예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해당 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그리스 시리자 정부의 긴축 수용에 반대하는 노동자 파업과 국회의원들의 반란

파노스 가르가나스(아테네에서)

7월 15일 그리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파업 행진의 선두에 섰다. 그 뒤로 병원 노동자,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 지하철 노동자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이날 아침 아테네 전역에서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공공부문노총(ADEDY)은 유럽연합이 강요한 3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구제금융안이 시행되면 전임 정부 때 해고됐다가 시리자 정부 때 복직한 재무부 청소 노동자 등이 다시 해고된다.

이날 행진은 저항이 이제 시작일 뿐임을 분명히 보여 줬다. 파업과 거리항의 시위는 의회 안에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 대중 속에서 좌파 정당 시리자의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에 대한 분노가 크다.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그리스 국민의 다수가 긴축에 반대했지만 시리자 정부는 태도를 180도 바꿔 훨씬 더 나쁜 안에 합의했다. 그래서 시리자 소속 노동조합 활동가들, 시리자의 지역위원회와 중앙당 활동가들이 이 결정에 반대해 거리로 나왔다.

합의안에 따라 긴축 법안을 통과 시키기로 한 7월 15일, 이런 움직임은 의회 내 반란으로 이어졌다. 시리자 내 좌파 의견그룹 '좌파 연대'(Left Platform)만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었다. 시리자 의원 중 32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 여기에는 장관 네 명도 포함돼 있다.

치프라스는 반란을 진정시키려고 안

간힘을 썼다. 표결에 앞서 치프라스는 인터뷰를 해, 반대표를 던지면 독일 재무장관 볼프강 쇼이블레와 같은 편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쇼이블레는 차라리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쫓아내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치프라스는 반대표를 던진 국회의장 조이 콘스탄토폴루와 전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를 추어올리며 제명 위협을 누그러뜨렸다.

치프라스

치프라스는 좌파 정부를 지켜야 긴축의 충격을 완회시킬 수 있다면서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치프라스는 국회의사당 앞 시위대를 해산시키려 경찰을 배치해 그 말의 진정성을 훼손시켰다.

시리자는 집권 직후 전임 정부가 세운 차단벽을 철거했다. 그 차단벽은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5일 밤 시리자 정부는 최루 가스를 사용했다.

공공부문노총은 7월 22일 또 한 차례의 긴축안 입법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려 한다. 민영화를 위협당하는 항구 노동자나 전력회사 노동자 등도 파업에 동참할 수 있다.

곧 내각 개편이 있을 것이고, 정부 고위직들은 몇 달 안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공공연히 말한다.

7월 16일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1965년 7월 봉기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진을 아테네에서 벌였다. 2015년의 7월에는 파업 물결이 일거나 선거 운동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둘다 있을 수도 있다.

번역 차승일



7월 15일 3차 구제금융안에 반대해 파업에 나선 그리스 노동자들.

개혁주의의 실패가 그리스 비극을 만들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기자 **데이브 수엘**이 7월 초 국민투표가 치러지던 시기에 그리스를 방문해 현지 상황을 취재했다. 꺾쇠 묶음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7월 13일의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를 '쿠폰타'로 여긴다. 어떤 면에서 이 견해는 타당하다. 유럽 지배자들은 재정적·정치적으로 악랄한 수법을 쓰며 그리스인들의 긴축 반대 국민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

그러나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의 대표이자 그리스 총리인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긴축에 합의한 13일, 그의 머리에 총구가 겨눠져 있던 것은 아니다. 그는 낯강도들에게 타협을 부탁했다. 그들이 거절하자 치프라스는 항복 말고 다른 계획이 없었다.

이 충격을 극복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솔직하게 돌아봐야 한다.

흔히들 시리자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7월 11일 시리자 중앙위원 스타시스 쿠벨라키스는 '맑시즘2015'의 한 워크숍에

서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켈리니코스¹⁾와 토론을 벌였다. [이토론회 보도는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wspaper.org/article/16058>] 쿠벨라키스는 이렇게 말했다. "시리자는 반자본주의 정당으로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시리자는 목표와 뿌리가 급진적인 사회운동에 있으므로 "자본주의 틀 안에서 노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개혁주의 정당과 다르다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같은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견줘 시리자가 신선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쿠벨라키스는 시리자 내에서 기탄없이 주장하는 커다란 좌파의 일원이다. 시리자 좌파는 정부의 전략을 분명하고 솔직하고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시리자 좌파는 그리스가 끝없이 양보할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켈리니코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행동하지 않는 한, 그런 비판은 효과가 없습니다."

7월 10일 그리스 의회는 국민투표



EU 집행위원장 융커와 손잡은 치프라스.

에서 거부된 것보다 더 나쁜 내용의 긴축안[유럽연합과의 협상에 그리스 측이 제출할 긴축안]을 승인했다. 그때 시리자 의원 중 단 두 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

8명은 기권했고, 7명은 집에 있었고, 15명은 반대하지만 정부를 지킨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시리자 좌파인 '좌파 연대' 소속 의원들은 좌파 쪽에 있었다.

켈리니코스는 이렇게 주장했다. "좌파연대" 소속 의원들은 일치 단결해서 반대표를 던지고 거리로 나와 적극적으로 반대 시위를 호소했어야 합니다."

시리자가 급성장한 2012년, 많은 시리자 지지자들이 시리자 바깥에서 좌파 정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비난했다. 시리자에 합류하지 않으면 사회주의자들은 영향력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테러리스트 출신

그러나 시리자와 사회민주주의의 경계선이 갈라져 나뉘는 것은 아니다. 토니 블레어와 가장 비슷한 성향의 그리스인 콘스탄티노스 시미티스(1996~2004년 그리스 총리)는 젊을 적 폭탄 테러를 계획하기도 했던 인물이다.

영국 노동당은 1994년까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그 안에 좌파도 있었다. 독일 사민당은 독일의 제1차세계대전 참전을 지지해 전쟁 공채 발행에 찬성표를 던졌을 때조차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표방했다.

개혁주의는 모두 자본주의 국가를 이용해 변화를 이뤄 내려 한다. 그러나 언제나, 개혁주의자들이 국가를 바꿨다고보다는 국가가 개혁주의자들을 바꿨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 투

쟁을 중시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조적 태도인 것은 아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노동계급의 투쟁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의 바위가 계속 돌게 할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다.

페트로스 콘스탄티누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당원이자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의 후보로 출마해 아테네 시의원에 당선한 활동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좌파 정부가 유럽연합 지배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파 정부의 등장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것이 우리의 권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울 태세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전에는 시리자 바깥 세력에게 미래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미래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스의 위기는 최상의 사회주의 자라도 혁명적 당이 없으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무장해제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62호 / 번역 차승일

그리스 경제 위기의 대안 논쟁

그리스 민중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국민의 대중)

차승일

그리스가 위기에 처하게 된 초기부터 대안을 둘러싼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다.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의 하나였다. 이른바 ‘그렉시트(Grexit)’ 논쟁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1월 총선과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드러난 그리스 대중의 뜻을 완전히 묵살하며 시리자 정부에 후퇴를 강요하는 지금 이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

우선, 유로존을 지켜야 하고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가면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긴축 반대 운동에 대응해 지배계급이 내놓은 협박

임을 알아야 한다. 특히 그리스 정치가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 이 협박이 기승을 부렸다. 7월 5일 국민투표 때 유럽의회 의장 마르틴 슈츠가 한 말이 대표적이다. “반대를 선택하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전력 공급이 끊기고, 생필품 수입이 차단되고, … 더는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전력과 대중교통 등 기초 공공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다.”

이는 공갈이다. 그동안 그리스가 ‘구제’금융이라고 받은 돈 중에 그리스인들의 임금과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 것은 없다는 점에서 거짓말이기도 하다. 오히려 지난 몇 달 동안 시리자 정부는 ‘구제’금융으로 빌린 돈을 갚아야 할지 아니면 연금을 지급해야 할지를 놓고 고심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제국연합(Empire Union)” 7월 15일 그리스 공공부문 총파업.

유럽연합과 유로존은 고쳐 쓸 수 없는 자본가들의 기구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유로존을 지켜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그들에게 유로화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유로화는 2002년 도입됐는데, 주된 목적은 세계 시장에서 달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축통화를 만드는 것이었다. 기축통화는 국제 거래에서 중심적 구실을 하는 통화를 뜻하는데, 미국 지배계급은 달러화라는 기축통화를 가진 덕분에 큰 이득을 누린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필요할 때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쉽게 말해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 시중에 푸는 정책이었다. 어떤 통화가 기축통화 구실을 하려면 그 가치가 보장돼야 한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유럽 지배계급은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에 의존해 유로화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 그래서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정부 부채를 GDP(국내총생산)의 60퍼센트로 맞춰야 한다. 가입 조건 자체가 상당한 긴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정부 부채는 GDP의 175퍼센트다.

유로화 도입은 유럽연합이라는 유럽 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이자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유럽연합의 뿌리는 1951년 설립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이다. 이름에서도 풍겨지듯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목적은 세계적 경쟁에 대응해 유럽 자

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었다. 개별 국가보다 더 강력한 국가 연합의 힘으로 말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옛 소련이 몰락한 뒤인 1993년 유럽연합이 창설됐다. 유럽연합 창설의 목적은 주로 서구 강대국들이 옛 동구권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2004년에는 옛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8개 국가가 유럽연합에 가입했고, 그 몇 년 뒤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도 합류했다.

활용론과 폐기론

그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전쟁도 확대됐다. 대표 사례가 유고슬라비아 내전과 뒤이은 나토군의 세르비아 폭격이다. 그래서

2012년 방한해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2’에서 강연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소티리스 콘토야니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요컨대 유럽연합은 국가도 아니고, … 무역블록도 아닙니다. 그것은 악랄하고 호전적이며 피로 얼룩진 제국주의적 연합입니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의 노동자들을 상대로도 전쟁을 벌였다. 유럽연합이 창설되는 과정에서 시장 규제가 완화·폐지돼 노동자 착취가 증대한 것이다. 독일의 경쟁력 강화 비결도 바로 엄청난 노동자 쥐어짜기였다.

요컨대,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진보적이기는커녕 노동자들에게는 유해한 존재다. 유로존과 유럽연합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악독한지는 그리스 국

민투표와 3차 구제금융 합의를 전후한 기간에 매우 극명하게 드러났다.

게다가 그리스의 유로존·유럽연합 잔류는 그리스 지배계급의 염원과도 맞닿아 있다. 특히,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발칸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구축하기 바라는 그리스 지배계급의 염원에 날개를 달아 줬다. 유로화 사용 덕분에 생긴 (발칸반도 화폐들에 견준) 구매력 향상을 이용해 그리스의 은행과 기업들은 발칸반도에서 민영화되는 공기업 등을 헐값에 쓸어들었다.

지금까지 서술한 이유에서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긴축을 중단하려면 유로존과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럽 통합 프로젝트와 국제주의를 혼동하면 안 된다

적잖은 좌파들이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한계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유럽연합으로 결속하는 것이 국민국가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국제주의적이라고 보는 듯하다. 그 논리적 결론은 그리스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에 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탈퇴한다고 해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있다.

“유럽 통화 연합[이] 해체[되면] … 국제 연대를 위한 노력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다.”(장석준, ‘해설’, 《위기·반란·대안》, 책세상, 2013)

“그렉시트’를 주장하는 좌파들은 … 자본은 국경을 넘어 성공하고 있지만, 노동자는 일국 노동조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 유럽 좌파들이 고립되고 있다는 그[에티엔 발리바르]의 지적을 새겨들을 필요는 있다.”(원시, ‘그리스 3차 구제금융 굴복과 투항인가, 전술적 후퇴인가’, <레디앙>, 2015.7.15)

이런 주장들은 유럽연합과 국제주의를 혼동하는 것이다.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

가 《공산당 선언》 말미에 한 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잘 보여 주듯이, 국제주의는 노동계급의 반자본주의적 단결을 추구하는 사상과 실천이다(강조는 인용자). 더 나아가 국제 혁명을 지향하는 운동이자 사상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보루인 유로존과 유럽연합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강화시킨다. 유럽 노동자들이 아직 자기 나라가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고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어도, 유럽연합에 대한 반감은 꽤 크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유럽연합 헌법이 부결된 것 등에서 그 반감을 볼 수 있다.

파시스트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내 노동자들을 경쟁시킬 뿐 아니라 비유럽 출신 이민자들을 배척하며 인종차별을 강화한다. 올해 초 지중해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8백 명이 목살한 사건은 유럽연합이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줬다. 이렇게 유럽 지배자들이 강화하는 이민자 배척과 인종차별은 유럽 곳곳에

서 파시스트가 성장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고 있다.

파시스트들과 우익 포퓰리스트들은 인종차별 이데올로기와 함께 유럽연합 반대 정서도 이용한다. 이 점은 그리스의 유로존·유럽연합 탈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가 되고 있다. “영국 보수당조차 유럽연합의 탈퇴를 내건 데서 알 수 있듯 탈퇴 그 자체가 진보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박석삼, ‘유로존 탈퇴 기로에 선 그리스: 현 시기 그리스 좌파운동의 평가’, <변혁정치> 3호, 2015.6.1)

그러나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유럽연합 반대 정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적 비판과 대안 제시가 더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극우와 파시스트들이 유럽연합 반대 주장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프랑스 경험이 좌파적 반대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 준다. 불과 3년 전인 2012년에만 해도 좌파전선과 좌파당이 꽤나 선전하면서 사회당 지지자들을 왼쪽으로 끌어당겼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만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시리자 전략의 실패를 애써 감싸는 견해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장석

준 기획위원은 그리스 3차 구제금융 합의 소식을 다루면서 “세상이 1930년대, 대혼돈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고 웅게 보고 있다.(장석준, ‘그리스 비극의 끝인가, 인류 비극의 시작인가’, <미디어스>, 2015.7.15) 그러나 그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시리자는 “유로존 안에 남아서”, “긴축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리스 정부는 ‘긴축 정책 폐지’ 전선에서는 참패했”지만, “유로존에 남는다”는 “나름 대단한 성과가 있었다.” 또한 “앞으로 3년간 8백억 유로 규모 구제금융을 받아낸 것도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그리스 자본주의의 이익(“유로존 안에 남기”)을 위해 노동계급의 이익(“긴축 정책 폐지”)을 희생시켰다. ‘절반의 성공, 절반의 패

배’가 아니라 노동계급을 배신한 것이다.

둘째, 구제금융을 받게 된 것을 성과라고 보는 것도 문제다. ‘구제’금융은 사실 은행들을 구제하는 자금이고 이것이 그리스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구제금융을 갚으려면 노동자들을 쥐어짜야 한다. 좌파라면 마땅히 구제금융을 반대해야 한다.

장석준 기획위원은 긴축을 반대하면서도 시리자 정부가 자본주의 국가 재직자로서 받는 압박 속에서 지지자들의 염원을 배신한 것을 두둔해 입장이 모호하다. 그래서 “이제는 그렉시트를 감내하더라도 새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민심의 새 흐름을 ‘투명하게’ 대변할 또 다른 정치 대안이 준비돼야 한다”는 그의 말이 알쏭달쏭하게 다가온다.

유로존 탈퇴 반대론의 정태적·추수적 관점

유로존·유럽연합 탈퇴의 결과가 노동계급에게 불리할지 모른다는 걱정도 있다.

“결국에는 지불 거부에 이은 유로존 탈퇴와 즉각적인 은행 국유화의 경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경로는 급격한 인플레이를 동반하고 생필품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대중에게 심대한 고통을 강요한다. 대중에게는 유로화 탈퇴라는 두려움(이 두려움은 현실에 근거한 두려움이다)이 있다. ... 라파비차스(그리스 경제학자)나 안타르시아가 말한 ‘진보적 탈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 탈퇴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대중의 선택이 있기 전에는 실현될 수 없다.”(박석삼, ‘유로존 탈퇴 기로에 선 그리스: 현 시기 그리스 좌파운동의 평가’, 《변혁정치》3호, 2015.6.1)

“그렉시트와 독자생존의 길 역시 정치적 주장과 입장으로서는 일정한 정당성은 있지만 위험한 실험이자 도박이다.”(원영수, ‘격동의 그리스 정세: 반긴축 국민투표와 치프라스의 반전’, 《변혁정치》6호, 2015.7.15)

근거 없는 문제 제기는 아니다. 유로존 탈퇴는 아직 없었던 일이고 유럽 지배자들의 협박 수준을 보면 그들이 어떤 보복 조치를 취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유로존·유럽연합 탈퇴론은 논증 단계는 통과했지만

실증 단계는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로존·유럽연합 탈퇴 반대론자들은 유로존 안에서 탈출구를 찾으려던 시리자의 전략이 파산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대중 정서

또한, 그리스 ‘대중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근거는 주로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인데, 7월 5일 국민투표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여론조사는 대중 정서를 제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주장들의 밑바탕에는 정태적이고 추수적인 관점이 있다. 첫째, 대중의 의식을 고정돼 있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정태적이다. 그러나 투쟁을 통해 대중의 의식은 발전할 수 있고, 때에 따라 그 속도는 좌파의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리스 대중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반대를 선택한 것처럼 말이다.

둘째, 현재 그리스 상황에서 “트로이카가 강요하는 긴축안을 경계로 하여 친긴축과 반긴축으로 나뉘어 전선이 형성되어 있다”(박석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그 “반긴축 반트로이카 투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수단까지 말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중의 평균적 의식을 좇는 것은 추수적이다.

노동자 통제 같은 급진적 요구가 필요하다

유로존·유럽연합 탈퇴는 과연 노동자에게 이로울 것인가? 또, 어떻게 탈퇴할 수 있는가?

노동자 통제 같은 급진적 조치가 필요하다. 7월 초 그리스에서 시행된 예금 인출 제한 사태는 노동자 통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 줬다. 유럽중앙은행을 통해 그리스 은행들에 대한 현금 공급을 끊어 생긴 사태이지만, 노동자들이 생필품을 구입하려면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7월 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어느 은행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상황은 일주일 안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현금을 대규모로 인출하는 것을 막고 노동자에게 임금과 연금을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업을 해야 하고 노동조합이 은행을 통제해야 합니다.”

또, 아테네 소재 병원 노동자들은 현금 없이 내원한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노동조합에 요청하기도 했다.

당연히 이런 급진적 조치를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조치들

을 시행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계급투쟁이 필요하다. 시리자 전략의 실패로 그리스 노동계급이 다시 한 번 혹독한 공격을 당하는 지금, 운동이 시리자의 실패와 동반 추락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이 점에서 혁명적 좌파의 능동적인 구실은 더 중요해졌다.

마지막으로, 국제 연대도 중요하다. 7월 5일 국민투표를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 보낸 연대 메시지는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줬다. 이렇게 그리스 노동자들이 전 세계에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데에는 단호한 거부 운동이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 벌어진 그리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힘을 얻고 희망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주민들도 연대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반대로, 위기에 처한 국가를 연명시키는 것을 더 중시해 국민투표 결과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린 치프라스의 배신은 그리스 노동자들에게도, 전 세계에서 지지를 보낸 사람들에게도 씁쓸한 실망감만 줬을 뿐이다.

그리스 위기는 ‘복지병’ 때문인가?

정선영

보수 언론과 시장주의 경제학자, 그리고 정부·여당은 그리스 위기가 과도한 복지와 연금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다수 한국인들의 바람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실을 조금만 따져 봐도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 그래서 여러 진보 학자들뿐 아니라 주류 언론에서도 반론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위기가 터지기 전 그리스의 사회 복지 비용은 국내총생산의 20퍼센트를 조금 넘어, 유로존과 유럽연합에서는 중간 수준에 불과했다. 2011년 그리스의 노인 빈곤율은 23퍼센트로 미국(10퍼센트), 터키(15퍼센트)보다 높았다. 그러므로 과도한 노인 연금 때문에 국가가 부도났다고 볼 수 없다.

그리스 위기의 원인을 부패나 지하경제, 탈세 등에서 찾으려는 주장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물론 부유층의 부패와 탈세 등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지하경제는 GDP의 4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이는 박근혜가 밝힌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와 비슷하다. 한국을 비롯해 부패 문제로는 그리스에 뒤지지 않는 나라들도 수두룩하다.

그리스 위기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는 세계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이다.

세계경제는 2008년 이후 장기 불황을 겪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는 1970년대 이후 실물경제의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비롯한 위기가 누적돼 터진 것이었다. 실물경제의 이윤율이 낮으니 자본가들이 투자를 충분히 하지 않아 경제 성장률이 둔화했고, 실물에 투자되지 않는 돈들이 금융 투기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웠다. 그러다가 부실해진 은행들이 파산하며 터진 것이 2008년 위기였다.

2008년 위기 때문에 파산한 은행과 기업들을 구제하느라 각국 정부는 공공재정을 투입했고 이 때문에 각국 정부 부채는 큰 폭으로 늘었다. 2007~13년 주요 국가들의



OX(반대)를 호소하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포스터.

GDP 대비 국가 부채를 보면 일본이 1백80퍼센트에서 2백39.3퍼센트로, 미국은 75.7퍼센트에서 1백21.9퍼센트로, 영국은 50.1퍼센트에서 100.8퍼센트로 늘었다(OECD 통계). 그리스의 빚은 2007년 1백12.8퍼센트에서 2013년 1백79.2퍼센트로 늘었는데, 세계적인 추세가 취약 지역 그리스에서 더 증폭돼 나타난 것이다.

유로존

다른 선진 자본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 경제도 1970년대에 급격한 이윤율 하락을 겪었다(아래 그래프). 이런 문제는 2001년 그리스가 유로존에 동참하면서 일시적으로 은폐됐다. 유로존 통합 이후 유럽연합의 자본이 대규모로 그리스에 유입됐다. 독일과 프랑스의 자본가들은 전보다 더 쉽게 그리스의 기업과 자산을 사들일 수 있었다. 유로존 통합을 통해 남부유럽 국가들이 빌릴 수 있는 금리가 독일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가들과 투자자들은 값싼 신용을 이용해 투기 거품을 일으켰다. 2000~08년에 그리스의 집값은 50퍼센트나 뛰었다.

기업주 언론들은 이 과정에서 그리스 국민들이 흥청망청 즐겼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유로존으로 편입의 이득은 그리스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2000년대 초·중반 그리스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뤘지만 빈곤율도 높아졌다. 당시 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임금인상율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

물론 유로존 통합의 가장 큰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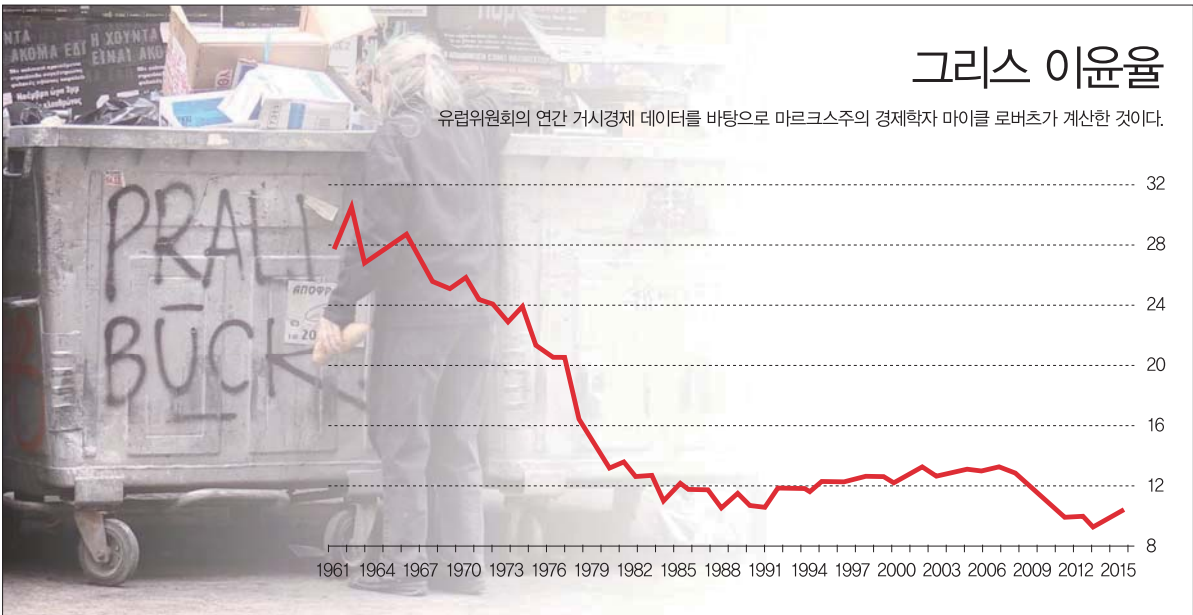
은 독일 같은 ‘핵심’ 국가의 지배자들에게 돌아갔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차입이 증가한 덕분에 소비가 늘어나자 독일의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 독일 수출품의 3분의 2가 유로존으로 갔다. 게다가 독일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독일 밖의 다른 유럽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독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그리스 등 일부 나라들은 통화 가치가 올라서 국제수지 적자가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닥쳤고 은행과 기업들은 부실을 지탱하지 못하고 급격히 위기로 빠져들었다. 그리스 정부는 민간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려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빚이 크게 늘었다. 그리스 부채 3천억 유로 가운데 6백억 유로가 은행과 자본가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투입됐다.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빠졌던 상황에서 금융가들의 투기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통합돼 있는 현실은 재정 위기를 헤쳐가는 데 큰 제약으로 작용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이 하고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돈을 풀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수출경쟁력은 높아진다), 재정 지출을 늘릴 수도(수요와 투자를 늘린다) 없었다.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유럽연합 소속 나라들의 한 해 재정적자는 GDP(국내총생산)의 3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다. 국가 부채는 GDP의 60퍼센트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

2008년 이후 위기 속에서 그리스의 공공부문 고용은 2009년 90만 7천여 명에서 2014년에 65만 1천 7백여 명으로 줄었다. 자살률은 35퍼센트 늘었고, 빈곤층은 27.6퍼센트에서 34.6퍼센트로 늘었다.

그러나 긴축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그리스 상황은 긴축이 위기의 대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 대중도 이를 잘 안다(국민투표 결과가 보여 주듯이). 문제는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대규모 노동계급 투쟁과 그 속에서의 정치적 경험이 알려 줄 것이다.



자료: 유럽위원회 연간 거시경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계산한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

그들은 왜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려 하는가

강동훈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또다시 강조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은 임금 피크제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등에서 보듯,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데 맞춰져 있다. 연공급제는 노동자의 생산성과 상관없이 오래 근무할수록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대면서 말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맡은 직무의 가치·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는 직무급제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차등을 두는 성과급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직무급제는 40대 후반까지는 임금이 오르다가 그 후에 직무를 나누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원리상 직무급제에서는 같은 일을 하는 노동자는 40세든 50세든 같은 임금을 받게 되므로 중장년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연공급제 하에서 급성장해 왔다. 연공급제가 다른 임금체계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 개발 시기처럼 기업이 급성장하고 따라서 직무 가치와 성과 기준을 새로 평가하고 만드는 게 어려울 때는 사측조차 연공급제가 더 효율적이라고 봤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무급제가 발달한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1970~80년대 구조조정 때 직무급제가 인력 재배치 등에 방해가 된다면 직무급제를 완화하기도



젊어서는 연공급제로 저임금, 나이 먹고는 직무급제로 저임금.

했었다.

이처럼 지배자들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임금 체계를 바꾸며 임금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익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배자들의 비난과 달리 한국의 현 임금체계가 성과와 상관없이 근속 기간으로만 임금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IMF 공황 이후엔 성과급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연공급제가 상당히 악화하는 방식으로 변해 왔다.

새 판

그럼에도 왜 한국 지배자들이 연공급제 자체를 폐기하고 직무·성과급제 등으로 완전히 새 판을 짜려 하는가? 우선,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 노동자의 평균연령은 44.2세다. 경제 개발기인 1974년의 36.3세보다 8세나 늘었다. 현대자동차의 노동자 평균연령은 47세나 된다. 그래서 연공급제의 요소가 임금을 억제·삭감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젊은 노동자들이 많을 때는 연공급제로 미래의 고임금을 약속하며 젊은 노동자들을 싼 값에 부려 먹다가, 그 노동자들이 나이를 먹고 고임금을 받을 때가 되자 직무급제로 바꿔 임금을 억제·삭감하려 드는 것이다. 중장년 시기의 임금이 직무급제 등으로 억제·삭감되면 청년 노동자들의 생애 전체 임금도 삭감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한편 지배자들은 연공급제 때문에 중장년 노동자들이 ‘희망퇴직’과 같은 방식으로 해고되고 사내 하도급이나 비정규직이 늘어난다며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수익성을 높이려고 노동자들을 마구 해고해 온 기업들이 직무급제 등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한다고 해서 정규직을 늘린다는 보장이 없다.

둘째, 지배자들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직무평가를 하게 되면 중장년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이 억제·삭감되는 직무와 그렇지 않은 직무로 나뉘게 될 뿐 아니라 청년 노동자들과 중장년 노동자들이 다른 임금 체계에 놓이게 된다.

게다가 지배자들은 이 기회에 성과

급제 요소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자에 의한 성과 평가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관리와 통제 압박을 더욱 많이 받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악화시킨 관리자 평가가 부활할까 우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보진영의 일부는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연공급제를 포기하고 대안적인 직무급제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 기업에만 적용되는 연공급제 때문에 임금 격차가 커졌다는 지배자들의 논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투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으니 제도 변경으로 노력해보자는 논리로 깔려 있다. 그러나 직무급제로 변경하면 임금 격차 문제가 완화된 것이라는 주장은 공상적이다. 기업주들은 비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만큼 올리기보다 별도의 직무를 만들 공산이 크다. 게다가 한국의 지배자들이 산업별 협상을 한사코 거부하는 상황에서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임금 제도 변화로 완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정부의 성과·직무급제 확대 시도를 막아 내야 한다. 이는 명백히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령대에 따라 노동자 생계비와 조응하는 연공급제는 여전히 장점이 있다.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헛된 기대를 품기보다 기본급만으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꾀하는 게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더 나은 것이다.

노동시간 피크제가 임금피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이정원

정부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이란 명목으로 고령 노동자 임금을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를 정당화한다. 즉 고령자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 자신이 청년과 고령자는 실업 원인이 다르고 종사 분야가 달라 일자리 대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2010년, ‘정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과 과제’). 실제로 OECD를 비롯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고령자와 청년 고용 사이에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졌다.

한국노총 조사에서는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고용이 증가한 경우는 불과 12.2퍼센트고 19.5퍼센트는 오히려 고용이 줄었다(2015년, 화학노련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결과).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정해진 고용 총량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다. 즉, 고령 노동자 임금을 깎았다고 그 돈으로 청년 고용을 늘린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와 기업이 투자를 늘리면 고용

은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일정 비율의 청년 고용 의무화를 강제하지만 해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내보유금의 1퍼센트만 풀어도 10대 재벌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일자리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다.

정부가 이런 대책에 무심한 것만 봐도 정부의 진정한 의도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가 진정한 목적인 것이다. 따라서 고령 노동자들과 청년들을 이간질시키려는 책략에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간질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인 만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때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노동운동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위선을 비난하면서도 임금피크제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는 듯한

중재인들이 나온다. 한국노총과 정의당,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씨 등이 지지하는 노동시간 피크제가 대표적 사례다. 예컨대, 임금이 피크임금의 80퍼센트로 줄면 주4일, 60퍼센트라면 주3일 일하는 식이다.

물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그 이후의 계속 고용에 대해선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말해, 정년 60세 이전의 임금 삭감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년이 지난 후에 임금이 줄어든 만큼 노동시간도 줄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시간 피크제는 60세 정년 이전부터의 임금 삭감을 수용하는 듯한 모호함도 있다. 예를 들어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정년에 즈음해서 … 노동시간을 줄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이렇게 모호한 태도로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추진에 일관되게 맞서기 어려울 수 있다. 한국노총이 “노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 도입”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또, 60세 정년 이후 노동시간 피크제도 위험성이 있다. 정부가 개악하려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탄력근무제*, 직무급제 확대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일방 강행

다른 한편, 노동시간 피크제는 임금이 삭감되더라도 정년을 연장해 고용을 지키는 것이 더 좋다는 발상이 깔려 있다. 정부의 임금 삭감 공세는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보는 셈이다.

이는 노동시간 피크제에 우호적인 한국노총이 임금을 깎고 노동시간은 단축하되 고용은 보장했다는 이유로 독일 ‘하르츠 개혁’을 부분적으로 긍정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하르츠 개혁은 노동자들 전반의 실질임금 하락과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려 빈곤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은 것을 보면, 고용 안정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 유연성을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안이 아님을 보여 준다.

최근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다시금 노사정위 재가동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김무성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불가피한 선택”

이라고 하면서도 “정부와의 대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악 때 그랬듯이, 지금 박근혜 정부는 주고 받는다는 의미의 사회적 합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저항의 확산을 막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도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별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을 개악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도록 하려 한다. 최근 공기업인 남부발전에서 2년 동안 90퍼센트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고 취업규칙 개악안 서명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격을 막으려면 가장 없는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분명하게 반대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탄력근무제

일이 많은 시기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시기에 그만큼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 탄력근무제로 연정한 노동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같은 가산임금을 받을 수 없다.



메르스 재난 와중에 몰래

제주 영리병원 재추진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보건복지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설립 신청에 위법 사실이 있어 이를 반려했다. 국내 자본가는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데도 외국 법인의 이름만 빌려 제주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했기 때문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등은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온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런 위법에 대해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신청을 반려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중단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뻔뻔하게 다시 영리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도 메르스 사태가 한창인 와중에 쥐새끼처럼 몰래 추진했다.

제주도는 6월 11일 녹지국제영리병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고,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 제주도한테 이를 접수했다. 그리고는 이 사실을 아무 데도 공개하지 않았다.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이에 대해 문의했을 때도 그런 일 없다고 발뻘했다. 당시는 새누리당 김무성과 유승민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원격진료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던 때였다.



이윤 중심의 병원 운영이 메르스 사태를 재앙으로 키웠지만 박근혜 정부는 의료 영리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도 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다시 문제점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공공의료 확충

그러나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법을 어기고 국내 자본가가 영리병원을 설

립하는 것이고,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국내 의료체계를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의료영리화저지제주도민운동본부가 함께 실시한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7퍼센트가 영리병원에 반대했다. 제주도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57퍼센트가 반대했다.

메르스 사태는 영리 추구에 목매는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보여 줬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메르스를 질병이 아니라 재난으로 키운 데 이어 이제 의료관광을 앞세워 영리병원으로 돈을 벌겠다고 한다. 또, 메르스 슈퍼

전파자인 삼성서울병원에 원격의료 특혜를 준 데 이어 내년도 원격의료 예산도 증액하려 한다. 이런 의료 민영화 드라이브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계속 만들 것이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김재현

갑을오토텍 1차 투쟁 승리가 보여 준 것

노조 파괴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박설

6월 23일 갑을오토텍지회가 전직 경찰과 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사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막아냈다.

사측은 근래 통상임금이 확대되면서 높아진 임금을 낮추고, 식당·경비 외 주화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등의 공격을 손쉽게 하기 위해 지난해 말 용병들을 대거 채용, 악랄한 폭력을 가했다. 특히 ‘공안동’ 황교안이 국무총리로 임명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17일에는 흥기로 무장한 용병들이 공장 라인을 돌며 노동자들을 집단 폭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즉각 전면 파업을 벌여 7일 만에 승리를 거뒀다. 메르스 사태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갑을오토텍 사측의 만행에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사측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갑을오토텍지회가 규정했듯, 이는 투쟁의 끝이 아니라 “1차 투쟁의 승리”였다. 용병들은 해고를 당했지만 여전히 기숙사에 남아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기업노조와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자행했다.

부품사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미치는 효과

갑을오토텍 투쟁은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럼에도 “1차 투쟁”의 승리는 지난 수년간 자동차 부품사에서 잇따른 노조 파괴 탄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우선, 이 투쟁은 부품사 노동자들이 완성차 생산에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갑을오토텍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에 어긋는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나자, 현대차 울산 공장과 기아차 광주 공장의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다. 애가 탄 현대·기아차 사측은 서둘러 협상을 타결하라고 주문했다.

부품사 노동자들의 힘은 이전에도 거듭 확인됐다. 2010년에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사흘 만에 완성차에 타격을 쳤고, 2013년에는 엠에스오토텍 노동자들이 똑같은 효과를 내며 파업 이틀 만에 승리를 거뒀다.

이런 효과는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 즉시 부품을 조달하는 ‘적시생산’ 시스템 속에서 더 두드러졌다. 현대·기

아차는 최근 이를 더 발전시켜 부품 조달과 완성차 생산을 거의 동기화시켰다. 이 과정에서 부품에서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생산체계가 갖춰졌고, 3백50여 곳에 이르는 1차 협력업체들 각각이 거의 유일한 부품 공급원이 됐다. 이 때문에 한 부품사에서 생산이 멈추면 현대·기아차의 라인 가동도 중단됐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동안 여러 부품사 노조들은 이런 강력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한 워크숍에서 직장폐쇄를 당한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지회 집행부는 노조 쪽이 현안문제를 일정 양보하면 직장폐쇄를 풀 것이라고 봤다”, “[회사 관리자는] 흑시나 해서 칼 꺼내 살짝 찔렀더니 폭 들어가더라고 하더라.”

부품사 노조의 만행이라 불린 만도지부의 집행부는 협상과 투쟁 사이에서 동요하다가, 정작 용역강제가 밀고 들어왔을 때 아무런 저항도 못해 보고 밀려났다. 유성기업에선 강렬한 공장 점거파업이 솟구쳤지만, 이런 투쟁은 더 지속되지 못한 채 며칠 만에 공장에서 쫓겨나 파업 효과를 잃었다.

원청 노조의 연대가 중요하다

부품사 투쟁이 더 큰 힘을 발휘하려

면 동종 산업 노동자들의 연대도 중요하다. 예컨대 2009년에 경주 인지컨트롤스지회는 이 지역 20개 부품사 노조들의 연대 파업에 힘입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원청인 현대·기아차 노조가 적극 연대에 나서는 것이다. 사실 지난 수년간 유성기업·발레오·KEC·에스제이엠 등에서 용역 침탈과 직장폐쇄, 복수노조 설립 등 악랄한 노조 탄압 공격이 이어졌을 때, 그리고 이에 맞선 투쟁이 솟구치며 사회적 초점을 형성했을 때조차,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등은 즉각 실질적 연대에 나서지 못했다.

이 속에서 여러 투쟁이 고립되고 장기화됐다. 지난해 1월 현재 금속노조 소속의 복수노조 사업장은 금속노조 전체 사업장의 15퍼센트가 넘는 49곳이나 된다. 이 중 대다수는 소수노조로 전략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부품사 노조들이 공격을 당하고 하나 둘씩 무너지면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들도 임금·노동조건 후퇴 압박을 받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노조들을 표적 삼아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단협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품사 노조들에 대한 공격을 그냥 보아 넘겨서

는 안 된다.

한편, 갑을오토텍 투쟁은 법원이 노동자들의 편이 아니라는 점도 보여 줬다. 법원과 검찰 등은 차일피일 수사와 판결을 미루며 사측의 불법 행위를 묵인·방조해 왔다. 최근 대법원은 노조 파괴 전문업체 ‘창조컨설팅’에 무죄를 판결하기까지 했다.

새정치연합은 금속노조 등과 함께 노조 파괴 사업주들의 악행을 폭로하고 규탄해 왔다. 그러나 이들은 투쟁이 확대·지속되면 어느덧 “대화론 풀자”며 투쟁의 김을 빼는 구실을 하곤 했다.

가령 2010년에 KEC 노동자들이 점거파업을 벌이며 연대의 초점을 형성했을 때, 새정치연합과 이들을 추수한 민주노총·금속노조·진보정당 지도자들은 ‘중재’를 자처하고 나서 공장 점거를 해제시켰다. 이렇게 투쟁의 동력이 약해지자 사측은 곧바로 탄압의 고삐를 쥐었다.

따라서 갑을오토텍지회가 그랬던 것처럼, 노동자들 자신이 굳건히 투쟁할 때 사회적 지지와 연대도 확대될 수 있다. 부품사 노조들이 강력히 제 힘을 발휘하고 완성차와 동종업체 노동자들의 연대가 뒷받침된다면, 악랄한 노조 파괴 탄압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 개선 방안 논의를 검토한다

장호중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50일이 지나도록 구성원을 정하지도 못한 채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에서도 서두르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계산하면 자립필요 미루고 있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 151호에서 이처럼 주류 정당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연금 강화 논의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사회적 기구’ 참여가 공적 연금 개선을 위한 수단인 걸까? <http://wspaper.org/article/15982>)

그럼에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 연금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노후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관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운동 내의 대안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의의와 약점을 통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진정한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하려 한다.

공적 연금 문제를 진보적 방향에서 오랫동안 고민해 온 단체들은 주요 운동하는 NGO와 노동조합, 그리고 개혁주의 정당 등 주류 개혁주의 단체들이다. 이에 비해 급진 좌파들은 노동자연대 등 일부 단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최근에야 공적 연금 쟁점을 둘러싼 각종 논의와 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아직까지는 전체 노동자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액수도 용돈 수준인데다가 장차 받게 될 사망도 주로 정규직 노동자들과는 점이 이유로 작용한 듯하다.

그러나 조지 노동자들이 대부분의 무직으로 공적 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고 1997년 IMF 사태 이래 연금제도가 신자유주의적 복지 개혁의 주된 타깃이 돼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태도는 좌파의 정치적 약점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의 혁명가 레닌은 이런 태도에 대해 “수많은 노동자들을 개혁주의자들의 영향력 아래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래서 공적 연금을 둘러싼 운동 내 논의는 상당히 온건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퇴직 전 월소득 대비 연금 액수를 뜻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제시된 것처럼 현재 주요 개혁주의 지식인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50퍼센트다. 2007년 국민연금 개악으로 당시 60퍼센트였던 소득대체율이 40퍼센트로 대폭 삭감됐는데, 10퍼센트는 기초연금으로 대신하고 국민연금도 50퍼센트로 되돌려 개악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50퍼센트라는 목표치는 40년 동안 보험료를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명목’ 소득대체율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 높아져야 한다. 가입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박근혜는 공적 연금을 공격하는 한편, 사적 연금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더 내서 더 받자’는 주장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사적 연금의 논리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어렵다.

25퍼센트를 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의 10퍼센트를 기초연금으로 받는다고 해도 월평균 소득이 3백만 원인 노동자가 퇴직 뒤에 받는 고작 1백5만 원을 받는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제시한 노후 최저생활비(부부 기준 1백60만 원)에도 모자란 액수다. OECD가 각국 정부에 권고한 소득대체율 70~80퍼센트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

누군가는 비현실적 요구라고 손사래 칠지 모르겠지만, 모를지기 요구는 대중의 필요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연금 개선 요구가 실질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대중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가치가 있는 수준 되는 데야 한다. 현재 연금 제도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주로 ‘용돈 연금’이라 부르는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낮은 요구는 개인적 해결책들(사적 연금, 저축 등)에 비해 특별히 나은 것으로 여겨지기 어렵다.

그럼에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에 소속된 NGO들과 민주노총 등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퍼센트를 요구한다. 정의당도 같은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연금행동’의 50퍼센트 요구를 지지하면서도 그전에 독자적으로 채택한 소득대체율 45퍼센트 목표를 폐기하지는 않고 있다. 이 목표는 상황돼야 한다.

노동당과 노동자연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2007년 개악 이전 수준인 60퍼센트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개악

이 이뤄졌는데 이를 정년 퇴직 시기인 60세로 맞춰 되돌리라고 요구하는 단체는 노동자연대가 거의 유일한 것 같다.

사각지대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임신, 출산, 미취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전체 가입 대상자의 절반이나 된다. 저임금 노동자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의 9퍼센트나 되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아예 가입을 회피하기도 한다.

따라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군복무 기간 등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각종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을 대폭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이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런 요구를 제시해 왔다. 다만 이 정도 조치로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노동자들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덜어 주거나 아예 면제해 줘야 한다. 그리고 기업주·부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연금 지급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가 나서서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등 노동자들의 소득 자체를 늘리는 것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기초연금의 도입 취지 자체가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대 20만 원밖에 안 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생계비 지원은



‘인간다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커녕 노인들을 열악한 일자리로 내모는 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다.

기초연금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70퍼센트에게만 20만 원가량 지급하고 그것도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최대 절반을 삭감한다. 심지어 기초생활보조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소득 인정액에 포함돼 사실상 ‘꺾다 뺏는’ 식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에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에 연동되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바꾸면서 물가에 연동되도록 바꿨다. 물가 인상을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생계비 지원은



‘인간다운’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

보다 낮기 때문에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다.

그래서 주요 개혁주의 단체들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A값)의 10퍼센트에 맞춰 모든 노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면 노동당은 20퍼센트로, 좌파노동자회는 30만 원으로(약 15퍼센트)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고 사각지대도 생기지 않으면 장점이 큰 것은 사실이다. 세금은 사

회보험에 비해 누진율이 높아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다만, 오 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먼저, 그 다음에는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순서를 제시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하다는 정부와 기업주들의 관점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한 듯하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굳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확대 중 어느 하나를 우선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원은 충분하다. 당장 5백조 원 가까이 쌓여 있는 국민연금 기금을 소득대체율 인상에 사용할 수도 있고, 기업주·부자들이 쌓아 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현재 10조 원밖에 안 되는 기초연금 재정도 대폭 늘릴 수 있다.

한편, 오 운영위원장은 증세를 통해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업주·부자뿐만 아니라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도 증세 대상이다.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 기업주·부자들뿐 아니라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지 재원 문제만은 아니다. 때로는 후세대 부담을 덜어 현대의 ‘책임 의식’을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연대’를 위해서라고 한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가 제시하는 저소득층 우선론이나 보편증세론은 근본에서 계급을 해체하고 사람들을 오로지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본가들에게 지나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 된다. 실제로 그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면세지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물론 기업주 등 자본가들과 부자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것은 불공평할 뿐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겠다고 “나도 더 낼 테니, 너도 더 내라”하는 식으로 물계급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진정한 ‘정의’와도 거리가 멀다.

이런 후퇴는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의 양보를 강제할 힘이 없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계급 개념을 사실상 해체시킨 데서 생긴 혼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계급 내 소득 격차와 계급 간 차이를 단지 양적 차이로만 여기다 보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자본가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험료

문제는 다수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이런 관점을 공유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정의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기업

부담금 조정, 보험료 인상 등의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은 조세 불평등을 비판하면서도 복지 확대를 위한 보편 증세를 주장해 왔다.

참여연대도 보험료 인상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일관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김영명 교수 등 참여연대의 복지 정책에 관련한 많은 학자들은 보험료 인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녹색당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니 아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녹색당은 복지 대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 장점을 부각하려다 보니 다소 종파적인 입장을 내놓은 듯하다.

안타깝게도 좌파 내에서도 보험료 인상에 대한 모호함이 존재한다. 노동당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보험료 조정”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좌파노동자회도 “고소득자에게 높은 연금보험료 중세 대상이다. 그는 복지 확대를 위해 기업주·부자들뿐 아니라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단지 재원 문제만은 아니다. 때로는 후세대 부담을 덜어 현대의 ‘책임 의식’을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연대’를 위해서라고 한다.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공정’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 같다.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가 제시하는 저소득층 우선론이나 보편증세론은 근본에서 계급을 해체하고 사람들을 오로지 소득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데서 비롯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자본가들에게 지나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도 불합리한 일이 된다. 실제로 그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면세지라는 사실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물론 운동 단체들의 보험료 인상론은 노동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정부의 태도와는 명백히 다르다. 그러나 기업주와 부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해 온 노동운동의 전통적 요구에서 후퇴한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예컨대 2000년대 초 민주노동당은 부유세와 군비 축소 등을 요구하고 보험료 사용자 전액 부담을 요구하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같은 구호를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런 후퇴는 한편에서는 지배계급의 양보를 강제할 힘이 없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계급 개념을 사실상 해체시킨 데서 생긴 혼란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계급 내 소득 격차와 계급 간 차이를 단지 양적 차이로만 여기다 보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자본가들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를 운영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편에 서는 관점이 필요하다

계급과 소득격차

그러나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크더라도 그것을 계급 간 격차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첫째, 노동자들의 소득은 대부분 생계비로 지출된다. 일부 저축을 하더라도 급의 세금과 보험료를 부과하면 사실상 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난다. 반면 자본가들의 소득은 그 자신이 아무리 사치스러울지라도 대부분 저축되거나 투자된다. 따라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도 자본가들의 ‘인간다운 삶’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세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은 대부분의 개혁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다. 그래서 법안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인상하려고 요구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도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누진율을 대폭 높이고 면세점을 높여 노동자들의 부담은 지금보다 줄이고 자본가들의 부담은 늘려야 한다.(<노동자 연대> 142호에 실린 ‘연말정산과 노동자 증세 논란 -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를 보시오 <http://wspaper.org/article/15418>)

둘째,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가들의 소득과 노동자들의 소득에는 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자본가들은 오로지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부를 늘릴 수 있다. 직접 부를 생산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소득이 제아무리 많아도 그 자신이 생산한 부의 일부만을 가져갈 뿐이다. 일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가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것은 그들이 다른 노동자들의 땀을 가져갔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원 김유선 소장이 노동소득분배율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 주듯이 비정규직·저임금 노동자들의 땀을 가져간 것은 자본가들이다.

따라서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본가들이 부담해야 한다. “노동계급에게 더 큰 케이크 조각을 얻는 것은 전술 문제이지(정의) 이론 문제가 아니다. 어느 것 하나 그들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으므로 바로 뺑질 전체의 소유와 운영이 노동계급의 정의 이론이 될 것이다.”(최일봉, ‘정의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 존 롤스 《정의론》 읽기’ <http://www.marx21.or.kr/article/pageView.marx?articleNo=82&pageNo=1>)

이처럼 계급을 착취에서 비롯하는 객관적인 관계로 이해한다면 자본가들에 맞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래서 자본주의자들도 동의하는 바다. 그러해 개혁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의 계급 개념을 일부 받아들인다. 자유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이전에 존재한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의 소유 정도나 각종 기회에서 편차가 아주 큰 사람들의 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 명백하다. 아무리 타고난 능력이 뛰어나고 노력을 해도 ‘금수저 물고 태어난 자들’에게 고용되는 게 삶의 목표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 까닭이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는 객관적 구실(이윤 창출) 때문에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의 지배를 끝장낼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라고 봤다. 이 점이아말로 마르크스가 당대의 공산적 사회주의자들과 근본에서 다른 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에게 복지제도 등 사회개혁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계급의식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이 복지 개혁, 노동과 운동에 관여해야 하는 까닭이다.

금수저

이 점 때문에 마크 베버 등 자유주의적 사회학자들은 모호한 계급 개념을만 들어왔는데 핵심은 계급을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 사회학적 ‘지위’에 따른 계급 분류는 주관적일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이런 계급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계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유용할 뿐

이다. 이들은 계급 분열이 사라졌다거나 더는 계급이 중요하지 않다가거나 따위를 설파한다.

셋째,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처지가 나은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연민을 느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이런 계급 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계급 간 분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그것을 강제할 힘이 필요하다. 계급이 착취에서 비롯한 객관적 관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자본가 계급을 설득해 개혁을 베풀도록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이는 개혁주의 정당이 집권한 나라들에서조차 역사적으로 거듭 입증된 사실이기도 하다. 당장 그리스 사례를 보라.

심지어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개혁을 내놓을 때조차 자본가들과 국가의 장기간에 걸쳐 조세와 사회보험 제도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겨 왔다. 따라서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게 일정한 양보를 얻어내려면 공통된 이해 관계를 중심으로 단결해 집단적 힘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자 계급 내 격차를 계급 간 격차와 마찬가지로 여기는 관점으로 노동자들을 분열시킬 수는 있어도 단결시키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노동계급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하는 객관적 구실(이윤 창출) 때문에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자본의 지배를 끝장낼 잠재력을 가진 유일한 계급이라고 봤다. 이 점이아말로 마르크스가 당대의 공산적 사회주의자들과 근본에서 다른 점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노동계급에게 복지제도 등 사회개혁은 그 자체로도 필요하지만, 이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계급의식과 조직을 성장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이 복지 개혁, 노동과 운동에 관여해야 하는 까닭이다.

김수저

이 점 때문에 마크 베버 등 자유주의적 사회학자들은 모호한 계급 개념을만 들어왔는데 핵심은 계급을 객관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이나 소득 수준 등 사회학적 ‘지위’에 따른 계급 분류는 주관적일 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이런 계급 개념은 궁극적으로는 계급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하는 자유주의자들에게 유용할 뿐

[김우리] 2015 노동자 투쟁,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 시간표는 후후 공지합니다. 노동자연대 웹사이트(workersolidarity.org)를 참고하세요.

노동자연대가 주최하는

노동운동 이틀 학교

2015년 8월 15(토) – 16(일)

장소: 서울 대학교 함화관 3층 기전홀 (4호선 혜화역 3번 출구)

주최: 노동자연대 / 참가비: 하루 13,000원 이틀 20,000원 /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약화되는 경제 위기, 박근혜 정부의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이 승리할 수 있는 사상과 대안을 깊이 있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도 환영합니다

노 동 운 동 이틀 학교 토 론 주 제

8월 15(일토)

- 한국 노동계급의 조건과 그를 둘러싼 쟁점들 — 마르크스주의 계급론으로 보기
-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당 건설
- 노동조합과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그를 둘러싼 쟁점들

8월 16(일일)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건과 운동
- 노동운동 전략 논의들을 살펴본다 — 사회연대, 연대임금, 사회적 합의 등
- 현재 추진 중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어떻게 볼 것인가?

[김우리] 2015 노동자 투쟁,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전망

※ 시간표는 후후 공지합니다. 노동자연대 웹사이트(workersolidarity.org)를 참고하세요.

국제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혁명가들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어떻게

7월 14일 영국 런던에서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이 모여 '긴축, 급진좌파 그리고 혁명가들의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원래는 그리스 사회주의자들도 참석해 발제도 할 예정이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모임 직전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의 고강도 긴축안에 굴욕적으로 합의해 급히 귀국해야 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의 토론 내용을 런던에서 김종환 기자가 전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발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사진)가 발제했다.

“오늘날 유럽 좌파는 역사적으로 새 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로 유럽 얘기를 할 테지만, 그 이론적·전략적 합의는 유럽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는 좌파들에게도 큼니다.

“새 국면의 배경은 자본주의가 심대한 경제 위기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금융 불안정과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장기 불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수석 경제자문이기도 했던 로렌스 서머스도 바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 글을 써, '저성장과 금융 불안정 때문에 그리스 위기와 중국 증시 폭락 같은 것이 일어나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지배계급은 경제 위기에 대응해 신자유주의를 더욱 밀어붙이는 방법을 택했고, 긴축은 그 결과물입니다. 긴축은 거대한 저항을 낳았는데, 특히 그리스와 스페인에서는 격렬한 저항 속에서 급진좌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의 부상은 국제적으로 혁명적 좌파와 급진좌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시리자는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영향이 더 컸습니다. 또한 긴축 반대 운동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 국제 좌파들이 이들의 선거 승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면도 있습니다.

“시리자와 포데모스는 역사가 사뭇 다릅니다. 그리스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산당의 영향력이 강했고, 시리자는 원래 공산당에서 분화해 나온 조직입니다. 스페인에서는 2011년 인디그나도스 운동['분노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광장 점거 운동을 가리킨다]으로 표

커다란 급진좌파 단체 안에 속해 있든, 더 작은 단체에 속해 있든, 독립적 조직으로 있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명료함, 둘째, 정치적 응집력, 셋째, 독자적으로 운동에 개입하는 능력.

출된 광범한 분노와 기성 정치권에 대한 환멸이 젊은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빠르게 결집하면서 포데모스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자는 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는 반면 포데모스는 다양한 포스트마르크스주의 흐름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정당은 이데올로기적으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스타시스 쿠벨라키스는 저와 토론하면서 그 공통 이데올로기를 '좌파적 유럽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유럽의 틀 안에서 긴축을 중단시키고 각국의 주권을 회복한다는 것이 '좌파적 유럽주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리자는 유럽연합 내부의 갈등을 이용해 적절히 타협하면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시리자의 2015년 총선 공약이었던] 테살로니키 강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리자는 선거 프로젝트로서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올해 1월 총선에서 승리했고, 1주일 전 국민투표에서도 크게 승리했습니다.

'좌파적 유럽주의'의 한계

“그러나 시리자의 한계는 선거 후에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의 결정적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 2월 20일 시리자는 추가 구제금융은 없을 것이라던 자신의 공약을 내던지고 전임 정부의 [긴축] 양해각서와 협상을 계승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7월 13일 시리자는 유럽연합에 굴복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시리자에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부채 탕감 반대, 국제 기구 감시 하에 진행되는 민영화 유지, 선출된 정부의 결정을 재정위원회가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재정 협정(그리스뿐 아니라 유럽연합 소속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지 등에서 유럽연합은 조금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의 하나는 독일 지배계급이 양보하는 것을 병적일 정도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독일 지배자들은 그리스에서 긴축의 고삐를 조금이라도 늦추면 독일의 경제 모델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긴축 반대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독일 총리 메르켈은 “내가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인들이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에 감히 도전했으므로 그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좌파적 유럽주의'는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유럽연합이라는 틀은 치명적 함정이라는 사실이 시리자와 시리자에 투표한 그리스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좌파적 유럽주의'가 개혁주의의 최신 버전이라는 점에서, 그 내부 모순이 드러난 것은 중요합니다. 지난 10~15년 동안 [유럽]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면서 '사회적 자유주의'로 나아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좌파적 유럽주의'를 채택한 급진좌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급진좌파 정당들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이미 취한 태도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급진좌파의 부상을 반겼고 그들이 대표하는 광범한 운동의 일부가 되려 했습니다. 우리는 종파적으로 굴지 않으려 했고, 이는 옳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했고 단일한 공식을 따르지 않았습다. 독일의 《마르크스21》 동지들은 디링케(좌파당)에 참여하고, 스페인의 '엔루차' 동지들은 포데모스나 카탈루냐 민중연합후보(CUP)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동지들은 [시리자가 아니라] 더 작은 세력인 안타르시아에 속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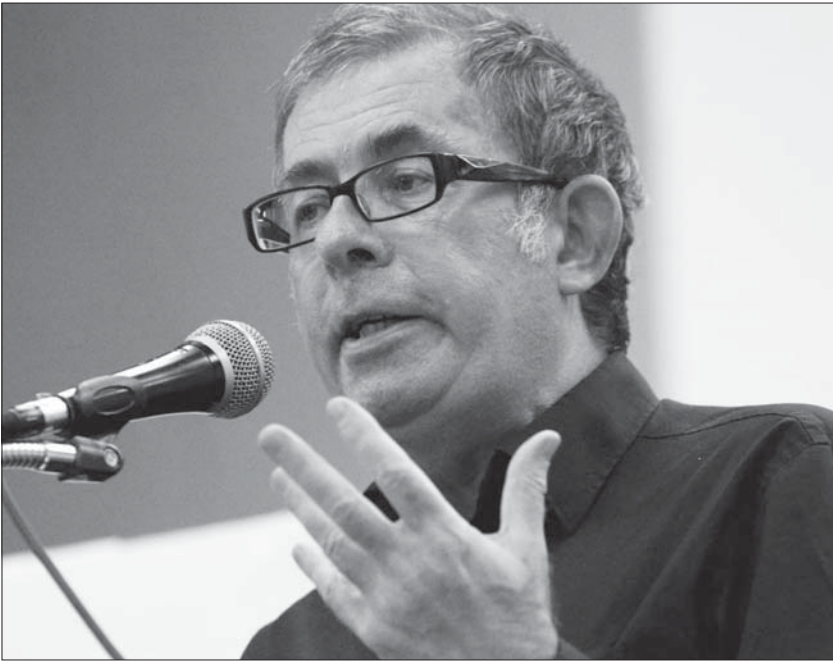
“우리가 커다란 급진좌파 단체 안에 속해 있든, 더 작은 연합단체에 속해 있든, 독립적 조직으로 있든,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명료함[뚜렷하고 분명함], 둘째, 정치적 응집력, 셋째, 독자적으로 운동에 개입하는 능력.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광범한 운동을 대변하는 모종의 급진좌파 정당에 속하지 않더라도 운동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SEK에게서 배워야 하는 점입니다.

“SEK는 시리자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고, 이 때문에 국제적으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SEK는 시리자에 들어가면 독립적으로 운동에 개입하기가 힘들다고 보아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시리자 좌파인 '좌파연대'(Left Platform)가 얼마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 SEK가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SEK는 또한 혼자서는 그리스의 세력관계를 바꾸기가 버겁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타르시아라는 더 넓은 반자본주의 좌파연합체를 결성했습니다. 안타르시아에는 공산당에서 분화한 신좌파조류(NAR)라는 정치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SEK는 안타르시아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단적



김종환 기자

으로 안타르시아는 정부의 국민투표 실시 발표 몇 시간 만에 반대표를 찍자고 주장하는 '오히'(OXI, '반대'라는 그리스어 낱말) 리플릿을 뿌리며 선동했습니다. 정작 국민투표 실시를 선언한 시리자 자신은 국민투표를 놓고 분열했습니다.

“안타르시아는 매우 효과적으로 반대표를 주창했습니다. 7월 5일 저녁, 반대 운동 측의 압도적 승리를 축하하는 시위가 신타그마 광장에서 벌어졌는데, 안타르시아가 깃발을 들고 입장하자 엄청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압도 다수가 시리자 지지자였는데도 말입니다.

“안타르시아의 구실이 어찌나 컸던지 시리자 사무총장조차 시리자 기관지에서 '안타르시아는 '오히'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결코 다른(SEK 등 안타르시아 소속) 좌파들에 우호적인 인물이 아니었지만 안타르시아의 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리자 지도부와 '좌파연대'가 위기를 겪는 지금 안타르시아는 노동자 운동에 더 넓은 뿌리를 내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쓰라린 방어적 투쟁이 계속될 것이고, 7월 15일 총파업은 그 시작입니다.

“SEK가 안타르시아를 결성하고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던 것은 SEK 동지들이 격렬한 논쟁을 통해 세 가지 조건(이데올로기의 명료함, 정치적 응집력, 독립적으로 운동에 개입하는 능력)을 지켜 냈기 때문입니다.

논쟁에 개입하기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광범한 운동에 속하고, 커다란 정당에 속하고, 게다가 그 정당이 선거에서 많은 표를 받으면 마치 자신이 몹시 중요해진 것처럼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독립적 세력으로 활동하지 않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당면 문제에 관한 전술들뿐 아니라 우리의 정치 일반으로도 가까워지도록 설득하려 하지 않으면 커다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효과적으로 개입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조직적으로 녹아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 좌파들 사이에 혼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 혼란은 [1999년]

시애틀 시위나 [2011년] 아랍 혁명 등 여러 투쟁에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공격이 그치지 않고 여전히 운동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은 상황을 반영합니다.

“국제적으로 운동이 전진하지 못하면서 갖가지 내향적 논쟁과 조직 분열 등이 벌어졌고 우리 SWP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이데올로기의 명료함, 정치적 응집력, 특히 독립적으로 개입하는 능력을 지켜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조적으로 굴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좌파 안에는 아주 중요한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좌파 정당 건설에 대해, 오늘날 노동계급의 상태와 잠재력에 대해, 여성해방과 페미니즘 등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 논쟁에 개입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 학자들처럼 '이것도 저것도 모두 소중한 입장들이고 사상은 다양할수록 좋기 마련'이라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개입의 목적은 우리의 정치 전통을 개발하고 더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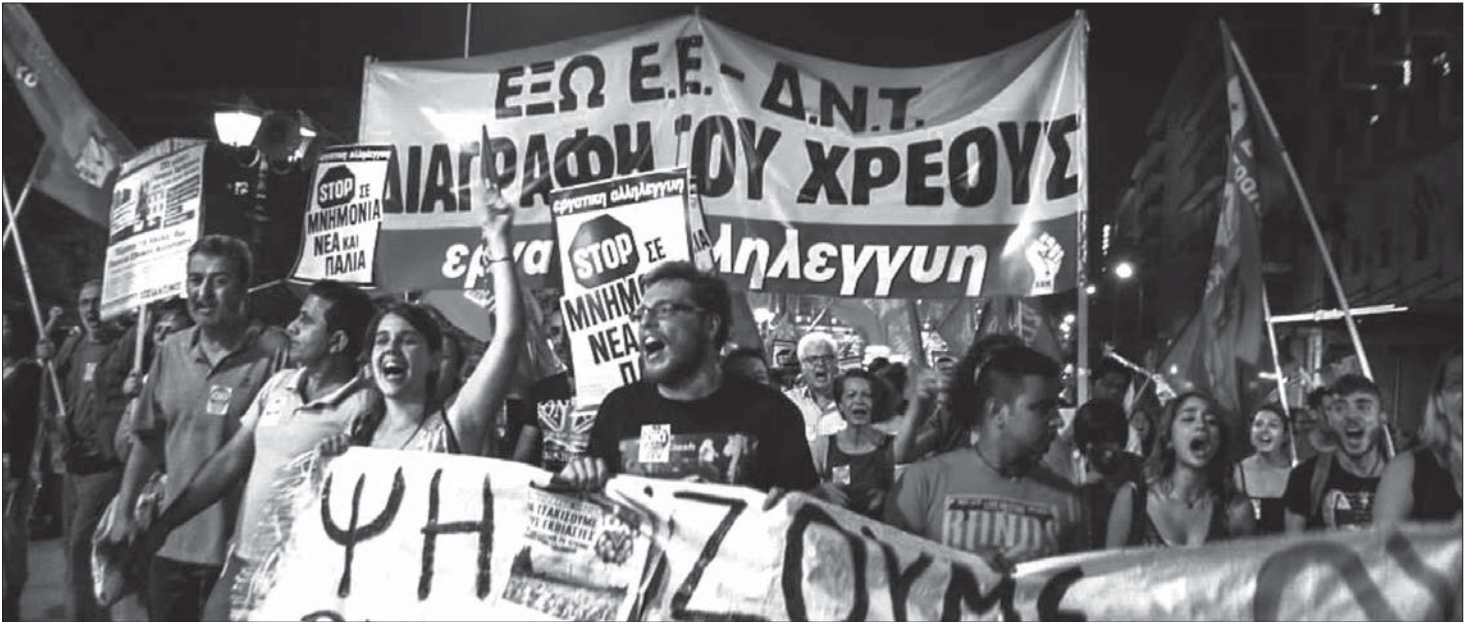
“과거에 했던 주장을 되풀이하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그 주장이 이론과 실천의 면에서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을 재발견하려고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통을 현실에 적용해서 더 풍부하게 발전시켜야 하지만(특히 여성 차별과 해방에 관한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계 등에서 유행하는 이론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 자체가 최종 목표인 것은 아닙니다. 이론은 우리가 정치적으로 더 확실하고 분명해지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고, 정치적 명확성은 다시 우리의 개입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흥분되는 일도 일어나지만, 또한 끔찍한 일도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리스 국민투표를 둘러싼 환희가 불과 1주일 만에 굴욕감으로 바뀐 것이 대표 사례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신속하게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하고, 또 급변하는 현실을 이론적으로 이해할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SEK 동지들의 경험에서 정치적 교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7월 5일 반대(OX) 측의 승리를 축하하는 시위에 참가한 안타르시아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활동가들.

청중 토론

이어서 청중 토론이 진행됐다. 청중 토론에서는 영국과 독일뿐 아니라 한국,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폴란드, 체코 등지에서 온 사회주의자들이 자국의 경험을 들어 주장했다.

독일 《마르크스21》활동가들은 좌파당 안에서 시리자 문제로 일어난 논쟁을 소개했다. 지금까지 좌파당 의원들은 독일이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긴축에 당론으로 반대했는데, 2월 20일 합의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다

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그 이유는 치프라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이끌어 낸 합의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마르크스21》동지들은 시리자 정부가 아니라 긴축을 반대하는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안 반대를 주장했다지만 역부족이었다. 심지어 《마르크스21》측의 한 동지도 시리자에 연대해야 한다는 압력 때문에 반대표를 던지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로부터 독일의 사회주의자들은 “트로이카가 시리자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시리자 정부가 광범한 좌파 진영에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 혁명가들에게까지 우경적 압력을 가하는 연쇄 고리가 있다면서 혁명가들이 그런 압력에 잘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사회주의자들은 시리자 중앙위원회가 4월 이래 소집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리자 의원단이 기층 지지자들과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상적인 주장이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인상적 주장들도 많았는데 대부분 켈리니코스가 정리 연설에서 다뤄, 따로 소개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한국) 노동자연대의 최일봉 동지와 기자 자신도 발언했는데, 기사 말미에 소개하겠다.

알렉스 켈리니코스의 정리 연설

마지막으로 알렉스 켈리니코스의 정리 연설이 있었다.

“독일의 한 동지가 레닌이 1915년에 ‘유럽합중국’ 개념을 비판하며 쓴 글을 소개했습니다. 이 글은 매우 유용한 글입니다. 당시 카우츠키뿐 아니라 트로츠키도 유럽합중국 개념을 지지했는데 레닌은 오히려 비판했습니다. 핵심은 자본주의의 불균등 발전 때문에 유럽 국가들을 한데 묶은 유럽합중국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럽연합의 구조적 특징도 레닌이 말한 불균등 발전을 보입니다. 유럽연합 안에서 독일은 수출이 증대해 경제가 성장했지만 지중해 연안의 남유럽 나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불균등 발전이 유럽연합의 핵심적 특징이고, 일각에서 얘기되는 ‘통일 유럽’이나 추상적인 ‘범(汎)유럽 연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유럽연합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토론도 있었습니다. 물론 영국의 국민투표는 우리가 요구해서 치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유럽연합 반대 목소리는 주로 좌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국의 국민투표를 유럽연합에 대한 좌파적 비판을 재건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주의나 중국 등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지 않으면서도, 국제주의 관점으로 유럽연합을 반대하는 주장을 개진해야 합니다.

“극좌뿐 아니라 극우도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충분히 강력하지 못하면 극우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스 SEK에게서 배우자는 것이 그들

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혁명적 좌파가 [급진좌파 정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 다른 단체들과는 일절 함께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큰 개혁주의 단체 안에서 활동할 때는 그저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주도성을 발휘해 [운동과 이슈에] 개입할 능력을 가져야 하고 또 주도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정치적 독립성

“SEK는 단지 이론적으로 올바른 분석을 제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맹렬하게 싸우고 운동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운동 안에서 시리자가 절대적 지지를 누리는 가운데서도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예전대 2012년 이후에는 그리스 노동자들이 시리자의 집권을 기다리며 노동자 투쟁이 다소 잠잠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SEK는 파시즘과 인종차별 문제를 놓고 운동을 건설했습니다. 당시 공산당(KKE)과 시리자 모두 크게 열의를 보이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SEK는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이라는 공동전선을 [2009년] 결성했고, 성공적으로 대중 운동을 건설하면서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시리자는 국제적으로 많은 좌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영국 SWP]도 약 3년 전 미국의 국제사회주의단체(ISO)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주의적대안’(Socialist Alternative)과 시리자를 두고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 생각에 그 논쟁들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레닌주의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맞는가’하는 문제와 연결돼 있습니다. 범좌파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레닌주의 정당 건설 노력을 청산하는 입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SWP 안에서 문제가 터지게 된 구체적 계기를 사소하게 여길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당시 SWP를 공격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시리자 지지자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 어느 회의에서 SEK의 파노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SWP에 대한 공격의 더 광범한 맥락을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진정한 레닌주의 조직을 건설하려는 노력에 대한 공격이다.’

“시리자가 좌파들을 끌어당기는 현상의 흔적은 우리 경향 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 동지들이 주최한 ‘맑시즘2015’에서 [시리자를 지지하는] [자코뱅] 편집자가 연설하고, 또 청중이 그에게 열렬히 환호한 것도 그런 인력(引力)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시리자가 좌파에 끼친 영향은 광범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분석이 옳았음이 이제 현실에서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리자 논쟁에는 더 중요한 함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 경향이 함께해야 하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조직이 실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보이려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르크스주의 이론도 같고 답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에서 전개되는 상황과 SEK가 거기서 하는 구실은 실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스 동지들의 경험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 내어 정치적으로 더 명확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주의자들의 기여 직장과 캠퍼스에서 정치적 핵심조직을 형성해야 한다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일봉 동지는 국제주의적 관점으로 볼 때 결코 제국주의 문제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긴축만이 유일한 관심사여서는 안 된다는 함의였다.] 그는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대외정책이 국내 정치의 연장선 성격이 강하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한국 같은 곳에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흔해, 제국주의 간 갈등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끼친다며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그 사례로 들었다.

최일봉 동지는 제국주의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진영논리가 부활하는 조짐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국 차악론이나 마오쩌둥 시대에 대한 착각이 있어 중국 국가의 성격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이에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국가자본주의론을 통해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원칙을 방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최일봉 동지는 현재 국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운동의 기층에 뿌리를 내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에게 신문을 판매하고 적절한 주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회원들이 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규율을 익히고, 전투적 노동자들 사이에서 신뢰도 얻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지금부터 현장과 캠퍼스에서 전투 능력을 갖춘 조직을 건설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사회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래서 단체가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선전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들이 사회주의자 의원을 보유하고 있고 청년들을 많이 가입시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것을 예들러 비판한 것이었다.

훈련

최일봉 동지는 사람들을 가입시키는 것뿐 아니라 회원들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10여 년 전에 크리스 하먼이 거리 시위 참가는 좋은 일이지만, 거리 시위를 통해서만 전술을 교육·훈련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조직을 건설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인용했다. 진짜 사회주의자가 되려면 치열한 전투에 직접 뛰어들어 경험을 쌓고 단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2년 전 SWP 위기 때 SWP의 많은 학생 당원들이 흔들렸지만 대학 접거 투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거둔 일부 학생 당원들은 굳건했는데, 바로 그런 훈련을 받은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인 나도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 운동에 개입할 때 만만찮은 어려움이 뒤따르므로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노동자연대의 경험을 들어 설명했다. 초기에 경험 부족으로 조직노동자 운동 담당자들이 잇따라 고배를 든 사례, 단체가 조직노동자 운동 쪽으로 역량을 기울이는 것에 반대한 한 지도적 회원이 거의 모든 조직노동자 회의의 반대로 철저히 패배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노동자연대는 조직노동자 운동의 기층에 뿌리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고, 그런 분석에 따라 시행착오와 내부 반발을 뚫고 수년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 전교조 투쟁과 철도 파업, 2015년 공무원노조의 연금 투쟁 때 투쟁의 한가운데에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주의자들은 단지 좌파 개혁주의에 대한 올바른 정책의 필요성뿐 아니라 오늘날 조직노동자 운동의 개혁주의(노조 관료가 대표하는)가 제기하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강조하고 싶었다. 특히 노조 지도자들의 집회·시위 선호(파업보다)와 그저 경고성의 형식적인 하루 파업을 넘어설 중기적 대안을 강조하고 논의하고자 했다.

이란 핵협상 타결

미국 제국주의의
악화를 보여 준다

이란 사회주의자 **니마 술탄자데**는 이란 핵협상 타결이 이란 정권만 도운 이란 경제제재를 끝내는 역사적 합의라며 환영했다.

7월 14일 세계 열강[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과 이란의 핵협상이 타결됐다. 이 역사적 합의 소식에 대다수 이란인들이 환호했다. 핵협상이 타결되면서 전쟁 가능성과 경제제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핵협상 타결은 미국 제국주의의 중동 장악력이 약화됐음을 보여 준다. 덕분에 이란에서 저항 운동의 가능성도 열렸다.

이란과 서방 열강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크게 양보했다. 이란 정부는 우라늄 농축을 8년간 제한하고 25년간 철저한 사찰을 받기로 동의했다. 심지어 군사시설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찰단에 개방하기로 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보유했을 권리를 인정했고, 이란 석유 산업과 은행 체계에 타격을 주던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런 양보 조치들에 양측 모두에서 내부 반발이 있었다. 이란 측에서는, 군부와 국유기업의 보수적 기득권층이 [국내 저항을 잠재우는 핑계로 이용하던] 반제국주의 이미지가 악화해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

[서방 측에서는,]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가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역사적 오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미국의 매파는 여전히 이란 정권을 미국 패권의 걸림돌로 보아 교체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이란 정책을 적대에서 견제로 바꾼 것은 중동에서 미국 제국주의가 약화된 것 때문이다.

1979년 이란 혁명으로 미국은 동맹이던 이란의 팔레비 권위주의 정권을 잃었고, 혁명 뒤에 탄생한 이슬람 공화국을 적대했다.

1980년 9월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하자 미국은 후세인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군사 정보를 제공하다가 나중에는[1988년] 이란 해군을 직접 공격했다.

경제 제재

1990년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은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했다.

2000년대 초 이란 개혁파 대통령 모하마드 하타미는 서방과의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를 원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2세는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다.

미군은 이란의 인접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점령했고, 부시는 전쟁을 벌여 이란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위협했다. 이란 군부는 미국의 침공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란 국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았다. 핵보유 능력을 전략적 자산 삼아 서방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길 원했을 뿐이다.

이번 협상 타결에서 최대 패배자는 미국 제국주의이고, 최대 승자는 이란 대중이다.

서방 정치인과 언론은 경제 제재가 이란 지배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제 제재는 그저 이란 지배자들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탄압을 강화하고, 암시장 등을 통해 돈을 벌 기회만 줬을 뿐이다.

이란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치렀다.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대중의 경제적 고통이 완화될 것이다. 그러나 [힘 있는 자들의] 부패와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는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번 협상 타결은 보수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하지만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 학생, 여성 운동 등의 활동가들은 이 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집단적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

최근 몇 달간 벌어진 이란 교사들의 저항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줬다.

전 세계 노동운동 활동가들은 이란 교사노조 지도자 에스마일 압디의 석방을 요구하며 연대 활동을 벌였다. 이는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이란 민중을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2462호 / 번역 최병현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중국 증시 중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CSI300 지수가 지난 한 달 사이에 크게 폭락했다.

중국 증시 폭락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 장세가 붕괴하다

이정구

지난 6월 12일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5천 1백66포인트를 찍고 한 달 동안 무려 30퍼센트나 급락했다. 6월 초에만 해도 중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10조 달러로, 1년 전에 견주 2백 퍼센트(6조 7천억 달러) 상승했었다. 당시 중국 증시의 상승분은 도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규모였다.

그리고 6월 12일 이후 3주 동안 3조 달러가 사라졌다. 이 액수는 한국 GDP(국내총생산)의 갑절이다.(그리스와 비교하면, 전체 외채의 7배, GDP의 16배다.)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 증시를 ‘국가가 주도하는 상승장세’, 또는 ‘시진핑 아저씨의 상승장세’라고 불렀다. 지난 5월 거품이 한창 일고 있을 당시 <런민르바오(인민일보)>는 ‘좋은 시절이 이제 시작되고 있으며, 주식을 사는 것은 중국의 꿈(中國夢)을 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중국 증시가 폭락하자 중국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했다. 6월 27일 중국 정부는 금리를 인하해 많은 돈이 증시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고, 신규 주식 발행(IPOs)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증권사·연금기금·국유기업에 주식 매입을 지시했다. 7월 5일에는 21조 원 규모의 ‘시장안정화기금’을 조성해 증시에 투입했다.

또한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공매도* 등으로 시장 조작을 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선물거래소는 선물 투자자들에게 선물 매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중국은행은 증시 안정을 위해 중국판 양적완화(QE)*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도 주가 폭락을 피하려고 스스로 거래 정지를 요청했는데, 상장사의 절반인

1천4백 개 기업의 거래가 정지됐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증시는 좀비로 변했다”며 “거래 정지가 풀리면 중국 증시는 또 요동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실 중국은 비상장 기업들이 상장하면서 얻는 이익을 제외하면 기업들이 증시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20퍼센트가 안 된다. 이 점에서 증시가 실물경제의 등락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가 사력을 다해 증

시 폭락을 막고자 했던 것은 바로 ‘신뢰의 위기’ 때문이다. <뉴욕 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증시 혼란을 중단시키지 못하면 시진핑을 둘러싼 ‘불패 신화’에 금이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Fitch)사의 애널리스트(분석가)는 이 사태가 “국가 기구의 신뢰 위기”를 부를까 봐 우려했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리커창 체제의 공식 출범 이후 최초의 흠집”이라고 지적했다.

왜 주식시장 거품이 형성됐고 폭락했는가

사실 중국 정부가 이번 증시 거품을 키웠다. 국유기업과 국유상업은행들의 부채가 지나치게 많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 붐을 일으켰다. 2012년 중국 정부는 주식시장에서 신용(외상) 거래를 합법화하는 등 금융시장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금융시장을 세계 금융시장에 연동시켰고, 서방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시장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홍콩과 상하이 주식시장의 교차 매매를 허용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의 거품 붕괴를 촉발한 당사자도 바로 정부였다. 규제 완화로 주식시장 거품이 커지자 중국 정부는 감당하기 힘든 금융 붕괴가 발생할까 봐 우려했다. 그래서 지난 6월 13일 중국 증권감독위원회는 신용대출 투자에 대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때부터 증시가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7월 1일 증권감독위원회는 6월 13일 발표를 번복했다.

주식시장이 붕괴하면 그림자 금융*이 붕

괴할 수 있다. 은행과 투신사들은 주식을 담보로 만든 자산관리상품을 판매해 신용대출 거래의 주된 자금을 충당해 왔다. 그러나 주가가 하락하면 자산관리상품이 부실해지고, 이것은 연쇄적인 신용 경색을 부를 수 있다.

▶ 13면으로 이어짐

공매도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가리킨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더 낮은 가격으로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여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양적완화(QE)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중에 돈을 풀어 주는 정책을 가리킨다.

그림자 금융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런 금융자들은 부실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림자’라는 별칭이 붙었다.

최신 중국 노동자 저항 소식들

이정구

최근 중국에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임금 체불 등 노동조건이 열악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커져가고 있다. 중국노동통신(China Labour Bulletin) 등 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중국 노동자 저항의 최근 소식을 전하고 있다.

중국노동통신에 따르면, 경기 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공장이 폐쇄되고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 그래서 제조업 부문에서만 1분기에 1백92건의 노동자 파업과 항의가 있었다. 가구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제조업 중심지인 동관에서는 몇몇 가구 공장주들이 전화번호를 바꾸며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야반도주를 했다. 쿤산 시에 있는 미국인 소유의 가구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20일 동안 파업을 해서 해고 보상비를 얻어냈다.

택시 노동자들이 제조업 노동자들과 함께 2분기 노동자 투쟁을 이끌고 있다. 택시 노동자들과 운수 노동자들은 운수업주에 대한 불만이 크다. 또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 무면허 택시와의 경쟁에 시달린다. 미국인 소유의 우버택시나 국내의 디디

와이디 같은 앱 콜택시가 하루 4백만 명의 승객을 운송한다. 택시 노동자들은 지방정부에 이들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하며 파업했다. 건설 노동자들도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있다. 중국노동통신은 광둥 주강 삼각주에 있는 신발공장 노동자 투쟁의 승리 소식도 소개하고 있다.

광둥 주강 삼각주는 “세계의 공장”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최근에 생산 비용이 치솟으면서 공장 폐쇄나 공장 이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장주는 노동자들

에게 알리지도 않고 공장 이전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은 대개 20년 가까이 일했고 그 지역이 삶의 터전이어서, 공장 이전은 이들의 삶에 큰 타격을 준다. 그런데도 공장주들은 최소한만 보상하거나 아예 보상을 하지 않는다.

광둥 주강 삼각주

그래서 노동자들이 집단행동을 하지만, 조직 능력, 고용주의 협상 의지, 지방정부와 공식 노조의 태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일부 노동

자들은 비정부 노동단체에게 연락해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판위라이드신발제조사(番禺利得鞋业有限公司)는 광저우에 있는 대만인 소유의 공장으로 노동자 2천7백50명을 고용하고 있다. 이 공장은 코치 같은 브랜드의 가죽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4년 여름에 이 공장 노동자들은 공장이 난사(광저우에서 꽤 멀리 떨어진 지역)로 이전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2014년 12월 6일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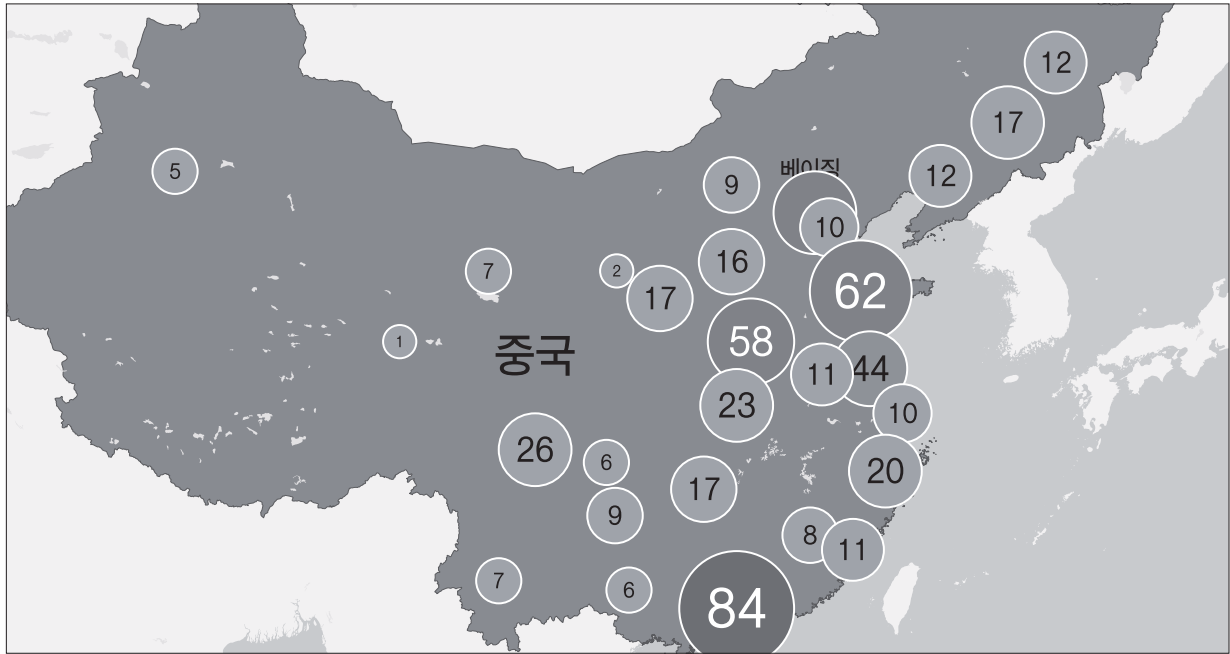
4월에 이전 보상, 주거 기금, 사회보장비 지급 등을 쟁취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반자본주의 신문 <레드 플래그 Red Flag>도 상하이에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저항 소식을 전했다.

상하이는 중국 자본주의의 중심지이다. 6월 말 수만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상하이 서남부에 위치한 진산 지구에 유독성 화학물질인 파라자일렌 공장을 신설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1989년 대규모 학생 시위 이후 가장 큰 시위였다.

중국은 파라자일렌 최대 생산국이다. 달리안, 닝보 등에서도 파라자일렌 생산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한 바 있다.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지방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방 관료들의 개인적 이득 때문에 파라자일렌 공장을 유치하곤 했다. 환경오염 유발 화학공장, 쓰레기 소각장 또는 핵발전소 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수일 때는 지방정부의 강경한 진압이 성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상하이에서는 이런 전략이 소용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며칠 동안 구금됐지만, 항의 시위는 줄어들지 않았다. 결국 상하이 당국은 파라자일렌 공장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2015년 2분기 노동자 파업 또는 저항의 전체 분포도.

중국 증시 폭락의 이면 — 실물경제의 침체

▶ 12면에서 이어짐

주식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가 터진 사태 이면에는 중국 실물경제의 침체가 자리잡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함께 디플레이(물가 하락)에 직면해 있다. 디플레이는 기업 수익도, 소비 지출도, 부채 부담도 악화시킨다. 지난 7개월 동안 인민은행이 네 번에 걸쳐 금리를 인하여 기업의 부채 부담을 줄여 주고자 했지만, 디플레이 때문에 대출 부담이 오히려 증대됐다. 중국 비금융기업의 연간 대출 비용은 GDP의 15퍼센트에 이른다. 그래서 중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2백80퍼센트에 이른다.

중국 경제의 침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는 바로 철강 산업이다. 2007년 후반 세계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중국 경제는 대규모 경기 부양 덕분에 ‘나홀로’ 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면서 철강 산업이 광적으로 확장되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이뤄졌다. 2014년 중국의 철강 생산은 8억 2천만 톤으로, 세계 2위 철강 생산국인 일본의 7배에 이른다. 중국에서 가동하지 않는 철강 시설(2억 톤)조차 미국 철강 산업의 두 배에 이른다. 철강의 과잉생산은 철강 가격 하락을 부추겼다.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철강 가격이 양배추 가격보다 낮았다.

자동차도 이와 비슷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국이다. 2015년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판매되는 것보다 1천만 대나 많은 자동차를 생산할 것으로 보

인다. 자동차 산업의 과잉생산 시설은 일본 자동차 판매량(2014년 일본은 5백50만 대를 판매했다)의 두 배에 이르렀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철강 산업뿐 아니라 이와 연관된 가구 산업, 시멘트 산업 등이 위축됐다. 중국의 시멘트 생산은 연간 29억 톤이었지만 실제 수요는 21억 톤에 지나지 않았다. 중국의 2백대 거대 공항 중 4분의 3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중국은 공항을 1백 개 더 건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잉생산

과잉 투자는 기업과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부채 증대는 국유상업은행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무원 산하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쉬처 연구원과 거시경제연구소의 왕위안 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적게는 4조 7천억 위안(약 8백50조 원)에서 많게는 13조 2천억 위안(약 2천3백89조 원)을 생산성 없는 분야에 투자했다.” 5년간 낭비된 투자액은 42조 위안(7천6백2조 원)으로, 전체 투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중국이 겪고 있는 문제는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산과 투자가 이뤄지는 자본주의 체제의 고질병에서 비롯한다. 시진핑은 중국 경제의 둔화를 “신상대(뉴 노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중국이 7퍼센트 정도의 중속도 경제 성장조차 유지하기 힘들

다는 것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시진핑·리커창 체제는 금융 부문에서 가장 급진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고, 실물 부문에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계획을 발표했다.

일대일로 계획이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계획에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석유 파이프라인과 항구 등을 건설하고 심지어 에베레스트 산에 터널을 뚫는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전략을 통해 중국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 경제들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하고,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시진핑은 이런 계획에 자금을 조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지위를 높이려고 아시아투자개발은행(AIIB)을 만들었다.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성장이 둔화해 1990년대 일본 같은 침체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 때문에 시진핑은 내부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는 정책들을 시행했고,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의 야심 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진핑은 주식시장 거품의 형성과 폭락이라는 체제의 심술궂은 보복을 당하고 있다. 또,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조건이 열악해진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주의적 패권을 둘러싸고 일본·미국과 겨뤄야 하는 냉혹한 현실에 처해 있다.

153호

온라인 기사를

읽어보세요

★ 4·24 총파업 울산 집회 폭력 사태
민주노총 중집은
이경훈 지부장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

★ 진보 교육감 취임 1년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변화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다

★ 악랄한 탄압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 다시 투쟁에 나선 레이테코리아 노동자들

★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동성결혼 인정 소송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

★ [서평]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70년 전 해방 정국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아시나요?

1925~27년 중국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난 사실을

1925년에서 27년까지 혁명이 중국을 뒤 흔들었다. 세이디 로빈슨은 이것이 저개발국에서도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주장한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90년 전 중국에서 제국주의 지배에 항의하는 시위가 도화선이 돼 총파업이 일어났다. 총파업은 혁명으로 발전해, 민중이 스스로 바꿀 수 있고 사회를 운영할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비극이게도, 1925~27년 중국 혁명은 혁명적 조직과 지도가 없다면 지배계급이 혁명을 유혈 남자하게 진압하리라는 것도 보여줬다.

20세기 초, 수익성이 높은 중국 지역들은 제국주의 열강이 장악했다. 열강은 중국의 시장을 개방하고, 중국 내 산업 대부분을 결판냈다. 이런 급격한 변화 과정에서 1911년 중국 정부가 무너졌다. 조계* 이외의 지역은 서로 경쟁하는 군벌들이 지배했다.

혁명은 민족주의 저항으로 시작했다. 1919년 학생들이 일본의 식민 침탈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차츰 학생 시위 이상으로 발전했다. 경찰이 학생 수백 명을 체포하자, 상하이에서 노동자 수만 명이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이 운동의 커다란 자극제였다. 1921년 중국공산당이 창당됐다. 천두슈(진독수)가 당의 지도자로 선출됐다.

1920년대 초 파업이 중국인 소유 기업으로 확대되자 군벌들은 반격을 가했다. 1923년 말쯤에는 노동조합과 공산당이 사실상 불법화됐다.

제국주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이 성장했다. 국민당은 중국 남부의 도시 광저우를 장악했다. 국민당은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는데, 이 당의 지도부에는 군벌, 지식인, 중간계급들이 뒤섞여 있었다.

공산당은 (자신보다 더 큰) 이 국민당과 손을 잡았다. 1923년에 이르러 공산당은 독립성을 거의 포기하고 국민당 좌파처럼 행동하게 됐다.

파업

1925년 상하이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잔혹한 관리자들을 규탄하는 파업을 벌였다. 5월 30일 파업 노동자 12명이 경찰의 손에 죽었고, 노동자 투쟁은 총파업으로 성장했다. 파업은 상하이를 넘어 다른 도시로 번졌다. 한 연구자는 5월 30일의 학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파업만 1백35건에 달했다고 기록했다. 40만 명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이 파업에 참가했다. 공산당은 급성장했다. 6월 23일 광둥성의 성도(省都) 광저우 시에서 행진하던 학생, 노동자,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1925년 홍콩 총파업 집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발포해, 52명이 죽었다.

대영제국이 홍콩을 차지했을 때 홍콩은 광둥성에 속해 있었다. 홍콩 노동자들은 영국의 식민 지배에 항의해 총파업과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였다. 노동자 25만여 명이 파업에 참가해 도시가 멈춰 버렸다.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홍콩을 떠나 다른 광둥성 도시들로 이주했다.

해럴드 아이적스는 《중국 혁명의 비극》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조직했는지 설명했다.

“파업 노동자 50명당 한 명의 대표를 선출해 파업위원회를 설립했고, 이 위원회가 13인의 실행위원을 지명했다. 사실상 중국 노동자 권력의 맹아였던 파업위원회의 후원으로 노동자와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하나와 학교 열일곱 곳이 설립·운영됐다.”

노동자들이 광둥성을 통치했다. 파업 노동자들이 도로를 순찰하며 영국 상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수화물을 검사했다. 해안과 항구는 농민들이 순찰했다. 파업 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재판을 열어 불매운동을 방해한 사람들을 처벌했다.

한 외국인 관찰자는 이들이 영국 상품 불매운동을 “홍콩과 대영제국에 맞선 전쟁이라고 봤다”고 썼다. ‘홍콩’이라는 지명은 “항기 나는 항구”라는 뜻인데, 사용하지 않은 영국 상품이 쌓이면서 파업 노동자들은 홍콩을 “냄새 고

약한 항구”라는 뜻인 ‘초풍’이라고 불렀다.

국민당은 노동자 투쟁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졌다. 국민당 세력은 중국 남부에서 세를 넓혀 1925년 6월 말 ‘국민정부’를 수립했다. 그러나 공산당이 점차 세력을 키우고 독립적으로 행동하자 국민당은 두려움을 느꼈다.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중국 공산당이 민족주의자들과 타협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당시 러시아 혁명은 고립된 상태였고 스탈린은 반혁명을 주도하고 있었다.

스탈린 지지자들은 노동자들이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맞선 독립적 투쟁을 이끌 능력이 없으니 계급을 뛰어넘는 단결에 의존해야 한다고 믿었다. 중국에서는 ‘진보적’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을 추수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노동자 투쟁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국민당은 혁명적 연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민당은 결코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혁명을 이용해 제국주의 열강과 협상을 맺는 것이었다.

계급

국민당 지도자 장제스는 유복한 상인 집안 소속이었다. 애초부터 국민당 일부는 공공연하게 반공주의 세력을 규합했다. 1925년 내내 투쟁이 계속되면서, 노동자들은 외국인 소유 기업들 뿐 아니라 중국인 소유 기업들에서도 파업을 벌였다. 그 전까지만 해도 노동자 투쟁을 찬양했던 중국 자유주의자들은 이제 “도를 넘은 멍청한 행동”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비난했다. 중국인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에 맞서 외국인 기업주들과 손을 잡았다.

노동자 투쟁은 사회의 핵심 분단선이 민족이 아니라 계급임을 드러냈다.

러시아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의 말처럼, “천대받고 착취당하던 임금 노동자 대중을 투쟁에 나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필연적으로 민족 부르주아지가 제국주의자들의 품으로 달려가게끔 한다.”

천두슈를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국민당에서 탈당하게 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지만당시에 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은 단일 국제 정당이었으므로 중국 공산당은 일종의 지부에 해당했다. 결국 경협이 더 풍부한 러시아 공산당에 굴복했다. 스탈린의 입장이 관철됐던 것이다. 중국 혁명에 재앙이 닥쳤다.

1926년 3월 장제스는 노동자 운동을 통제하려 행동에 나섰다. 정치 활동가들을 체포하고 ‘광둥-홍콩파업위원회’를 침탈했다. 무기도 모두 압수했다. 스탈린은 이것이 영국이 퍼뜨린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 공산당원이 국민당 당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새 당규가 통과돼 국민당 내 공산당의 영향력에 제약이 가해졌다. 이에 따르면 공산당은 공산당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도 국민당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7월 국민당군이 복벌을 시작해 중국 북부 점령에 나섰다. 지방 군벌에 신물이 난 농민들이 각지에서 들고 일어났다. 농민 수백만 명이 조직됐다. 1927년 1월이 되자, 후난성에서 농민회에 가입한 농민의 숫자가 2백만 명이 넘었다. 농민들은 세금을 철폐하고, 소작료 납부를 거부하며 토지를 점거했다. 농민들은 전곡·도박·아편을 금지하고 학교와 도로를 세웠다.

농민

농민들은 세상을 아주 달리 보게 됐다. 어떤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흙과 나무로 빚은 신들은 신성을 완

전히 잃었다.”

국민당 지도부는 노동자들을 이용했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농민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입지를 다졌다. 아이적스는 이렇게 썼다. “대부분의 경우 국민당 군대는 민중이 자발적으로 봉기를 일으켜 이미 확보한 지역에 진주하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민족주의자들은 농민 봉기도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농업 문제를 담당하는 공산당원에게 농민 봉기를 통제하라고 명령했다. 농민들은 ‘반혁명적’ 지주만 공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장제스는 광둥성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8월 장제스는 “노동자들의 소요 행위”를 전부 불법화했다.

1927년 초 국민당은 상하이로 향하고 있었다. 노동조합들은 국민당을 맞이하려고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그러나 국민당은 진군을 미뤘고, 그동안 군벌들이 노동자들을 공격해 수백 명을 학살했다. 마침내 국민당이 상하이에 도착했을 때 노동자 시민군이 도시를 통제하고 있었다. 국민당은 노동자 시민군에 무기를 넘기고 일터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공산당은 이를 지지했다.

공산당에 대한 국민당의 공격이 점차 심해졌다. 노동조합 투사 수천 명이 구속돼 수감됐다.

일단 노동자·농민 투쟁을 이용해 주도권을 장악하고 나자 국민당은 운동에 등을 돌렸다. 사용자들과 지주들은 이것을 공세로 전환하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였다. 사용자들과 지주들은 공장과 사업장을 폐쇄하고, 농민들에게 대출을 거부하고, 예금 인출 소동을 일으켜 현금을 마구잡이로 쓸어담았다.

반혁명이 노동자·농민 조직을 짓밟았다. 아이적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혁명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대가로 반혁명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주들은 농민들을 참수하고, 생매장하고, 사살하고, 목을 매달고, 불태우고, 토막 내 죽였다. 한 기자는 일부 지주들이 “농민들을 나무에 매달고 천번을 그어 상처 낸 뒤 상처에 모래와 소금을 뿌렸다”고 썼다.

트로츠키는 공산당이 노동자 평의회를 건설해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능케 할 잠재력은 있었다. 그러나 혁명가들은 [국민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직하지 못했다. 당에 새로 가입한 수많은 투사들과 지도부의 다수가 살해당했다. 이 경험 때문에 천두슈는 트로츠키를 지지하게 됐다. [중국 공산당의] 스탈린주의 지도부는 스탈린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당한 패배를 천두슈의 탓으로 몰아 그를 비난했다. 이 패배 때문에 공산당은 조직 노동자들에게서 물러나 농민 계층과 게릴라 투쟁에 몰두하게 됐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62호 / 번역 김준호

조계

제국주의 열강이 중국에 대해 불평등 조약을 강제한 결과 중국 각지에 확보한 반(半)식민 구역. 이 안에서 제국주의 국가들은 징세권, 행정권,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었고, 곳에 따라 자체의 통화를 발행하기도 했다.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위해

공무원노조 분리 주장들을 반박한다

박천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박근혜 정부는 ‘법의노조’인 공무원노조와는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합법 노조’를 내세워 공무원노조의 분리를 획책하는 이층재를 만나서는 규모를 키우면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 줄 것처럼 하고 있다. 이층재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에게 앞으로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자신이 만든 전국통합공무원노조로 올 것이라며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기구)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구걸했다.

아비하게도 정부는 인사기구를 통해 연금 삭감을 벌충하고 싶어 하는 조합원들의 심정과 이층재의 노조 분리 책동을 이용해 공무원노조를 약화시키려 한다.

게다가 최근 공무원연금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다. 투쟁에 앞장선 노조 활동가들을 탄압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이층재는 이런 상황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이용해 노조를 분리하려 한다. 어처구니없게도 최근 이층재는 자신이 처음부터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국민연금 인상’이 목표였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인상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일부 양보해야 한다며 개악안을 지지한 연금행동 소속 일부 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려는 계산인 듯하다.

실제 참여연대와 여성단체연합 등 NGO들은 5·2 여야 합의안 환영 성명을 낸 바 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양보와 국민적 이익이라는 명분을 통해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 전술이었다며 이층재의 배신적 타협을 미화했다. 민주노총



김영민

아비한 분리 책동에는 단호하게, 정부의 공격에는 단결로 맞서야 한다.

도 여야 합의안에 ‘국민연금 인상’ 부분을 부각해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층재는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자신을 사퇴시킨 공무원노조 중집과 활동가들이 국민연금 인상에는 관심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몰아가려 한다.

그러나 이층재의 배신을 비판하고 그에게 책임을 묻은 간부들과 활동가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야 국민연금 개선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재정 절감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겠다는 정부가 그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큰 국민연금 지출을 늘릴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퍼센트로 인상” 문구에 대해 청와대는 격한 거부 반응을 보였다.

이층재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하위직 연금을 최대한 지킨” ‘하후상박’ 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개악안은 사상 최악의 개악이자 ‘하박상박’이었다.

이층재는 이런 정당한 비판을 한 세력을 “정파적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로

매도한다. 그러나 이층재의 배신적 합의를 비판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층재야말로 대의원대회와 중집 등 공식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번복하고 거짓말로 조합원과 동료 간부들을 속인 비민주적 리더십의 화신이었다.

노동자 운동의 건강한 전통은 노동조합 지도자가 배신하거나 민주적 결정을 어길 때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대안적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뿐 아니라 연금행동 등 진보진영은 이층재의 노조 분리 책동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적반하장

한편 이층재는 공무원노조 중집의 인사기구 참여 결정이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배신적 합의였다고 비난해 놓고, 이제 와서 참여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다만, 공무원노조 중집의 인사기구

참여 결정도 부적절했다. 공무원노조 중집은 연금 개악으로 빼앗긴 임금을 벌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층재의 분리 시도에 흔들리는 일부 조합원들을 다독이려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공무원노조를 흔들고 탄압을 강화하는 시점에 인사기구 참여 결정은 조합원들을 더욱 흔들리게 할 뿐이다.

결국 정부는 ‘법의노조’ 핑계를 대며 공무원노조를 인사기구에서 배제했다.

2013년 규약 개정 후 노조설립신고를 냈다가 정부에 의해 뒤통수를 받은 것과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공무원노조 내 일부에서는 합법노조로 가기 위해 해고자를 정리해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일에 12만 명이 모이고, 공무원노조가 투쟁에 나설 태세를 보여 주자 이번에는 ‘법의노조’를 향해 ‘대화’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지금 상황에서 다시 굴욕적인 후퇴를 한다면 정부의 기세만 높여줄 뿐이다.

수많은 공무원 단체 가운데 공무원노조가 대표 조직이 된 것은 투쟁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해왔기 때문이지 법과 정부의 명령을 잘 따랐기 때문이 아니다.

공무원노조 중집은 이층재의 노조 분리 시도에 맞서 단결을 호소하고, 조직 내부를 추스리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층재와 그 지지자들이 조직 분리를 정당화하는 주장들 가운데 일부를 수용하거나 침묵해선 안 된다. 단호하게 논쟁하는 게 괜한 논란만 일으킨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논쟁할수록 조직 분리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은 이층재의 분리 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운동을 기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에게 굴종을 강요하는 KG그룹

“우리의 거부 의지는 아스팔트 열기보다 더 뜨겁다”

폭염이 모든 것을 녹여 버릴 것 같은 날씨.

KG로지스택배의 무더기 집단해고에 맞선 투쟁이 24일째 접어들었다. 우리 조합원들은 지난 주에 상경해 KG그룹 본사와 KG그룹 광재선 회장이 장로로 있는 수서의 모교회, 그리고 광재선 회장의 집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한 달 가까이 투쟁하면서 우리는 광재선 회장의 위선과 KG그룹이 노동자들을 그저 일이나 하는 노예나 기계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몸소 실감하고 있다.

우리가 처음 교회 앞에서 홍보전을 하다 마주친 광재선 회장은 성도들 앞에서 “KG로지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 날 KG그룹 본사에서 열린 면담에서 사측은 우리에게 장황한 설교를 늘어놓더니 대화를 외면하고 피해 버

렸다. 마치 앞에서는 교섭이 타결될 것처럼 시늉하다가 무더기 해고한 6월의 상황이 재현되는 듯한 느낌이었다.

7월 16~17일, 사측은 일부 지점 직원들을 동원해 우리가 농성을 하는 본사 앞과 광재선 회장 집 앞에서 주민들에게 우리를 매도하는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앞으로 사측은 현수막과 팻말까지 들고 나를 계획이라고 한다.

사측은 “[간선기사들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우리 간선기사들은 ‘1년 내내 KG로지스의 배송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직접 제공’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다. 1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한 간선기사들을 하루아침에 일자리에서 내쫓고 해고가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다.

“[교섭에 나갔던 실무차장은] 요구사항을 대표에게 전달만 하는 역할이니

협의내용은 KG로지스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노동자들이 회사의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심지어 KG로지스택배 최병선 대표가 위임을 했다고 실토한 녹취록이 있는데도 그런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조합원 총회에서 제명된 전 분회장과 진행한 교섭 때는 실무차장이 회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처럼 말하며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분열 책동

무엇보다 압권은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만 차별대우를 요구한다’는 거짓말이다. 물가인상, 경제 위기 속에서도 10년간 제자리 걸음인 운송료를 사측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떤 간선기사가 불만이 없겠는가. 사측의 삭감안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자리를 빼앗길까 봐 차마 입 밖으로 불만을 내뱉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투쟁하는 동안 사측은 투쟁하는 조합원들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며 분열을 책동했다. KG로지스는 해고된 조합원들에게 하청 운송업체인 ‘한국통운’, ‘진보’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면 ‘운행요청확인서’에 서명하라고 회유·종용했다. 운행요청확인서에는 “본인은 화물연대를 탈퇴하여 (한국통운, 진보)와 간선운행을 간절히 원합니다”, “앞으로 본인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와 같은 굴욕적인 문구가 적혀 있다.

특히 “간선운행을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문구는 사측이 얼마나 간선기사들을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하는 자존감 없는 존재로 취급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동료 간선기사들은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삼키고 일할 것을 강요받아 왔다.

그래서 우리는 투쟁을 시작할 때부터 동료 간선기사들에게 일방적인 운송료 삭감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설득했고 우리 투쟁에 함께하는 동료들이 조금씩 늘었다.

사측은 동료 간선기사들이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 동참하는 것을 막으려고, 탈퇴를 종용하고 있고 화물연대를 와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우리는 사측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 KG택배 화물 노동자들은 쓰러질지언정 결코 무릎을 꿇지 않을 것이며 화물연대 조직을 믿고 끝까지 투쟁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KG로지스는 기억하라! 우리 조직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권영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대전지부 KG로지스 택배분회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 또 터지다

김문성

위키리크스의 폭로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불법 수단으로 수년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정황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자료를 분석해 언론들이 폭로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이탈리아 기업 '해킹팀'한테서 구매한 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국내 사찰을 해 왔다. 해킹팀은 각국 정부들에게 반정부 세력 감시 기술을 판매해 악명 높은 곳이다.

국정원은 2010년에 '나나테크'라는 업체를 통해 해킹팀과 접촉한 뒤 2012년 초부터 해킹 프로그램 '다빈치'를 구입해 본격적인 공작을 펼쳐 왔다. 국정원은 최근까지도 추가 기술 보완 등 애프터서비스를 받아 왔다. 2014년에는 지방선거에 대응해 TNI라는 새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험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와이파이에 접속만 해도 스파이웨어가 심어지는 기술이라고 한다.

반민주 부패 스캔들

국정원이 구매한 해킹 기술은 스미싱 등 교묘한 방식으로 감시 대상의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스파이웨어를 심어서 감시 대상자는 모르게 감시자가 해당 기기를 아예 원격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내 스마트폰으로 감시자가 나를 찍고 내 말을 녹음해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끔찍한 기술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정보기관(감시기관)이라 할지라도 사용이 금지된 기술들이다. 이 반민주적·불법적인 감시를 위해 쓰인 (현재까지 파악된) 예산이 3년간 8억 6천만 원이다.

국정원이 이런 불법 해킹 기술을 검토·도입한 2011~12년은 이명박 정부가 정권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정권 재창출을 걱정하던 때였다.

이때가 바로 원세훈의 국정원이 앞장서서 군부를 포함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관들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총체적 정치공작'에 동원한 때였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임기 초부터 위협한 국가기관들의 대선 불법 개입 스캔들이었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 공작도 이런 공작의 일부로 시작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우파 결집을 위한 보도 통제,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협박 분열 공작 등을 위해 이런 감시가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국정원은 내국인이 주로 쓰는 삼성 갤럭시 폰, 카카오톡의 메신저와 게임 등의 해킹을 의뢰했다. 스파이웨어를 심으려고 보내는 메일, 문자 등의 '낙시'에는 국내 맛집 정보 링크나 영화 무료 보기 무료 앱 등이 이용됐다.

또한 천안함 폭침설(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이견을 제시한 재미동포 학자가 스파이웨어 침투의 표적이었다는 것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2014년에는 '예산 삭감 때문에 새 프로그램을 구입하지 못하니, 기존 구매품의 업그레이드만 요청했다'고 한다. 2013년 국가기관 대선 개입 항의 촛불 운동 등의 여파 때문인 듯한데, 실제로 예산이 줄어든 부서는 대선 개입과 직접 연관된 국내 पार्ट라인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 간첩 감시를 위해서라는 변명이 거짓말이고, 국내의 정부 비판 세력 감시가 주 목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해킹 프로그램 확충과 보완도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전국 선거와 시기를 같이한다.

한마디로 이번 스캔들은 우파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예산을 불법으로 써서 반민주적 공작을 벌인 전형적인 '반민주 부패 사건'인 것이다.



안보? 국정원을 정권 안보만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적을 감시·통제하려는 기구다. 따라서 이윤 논리에 동전하는 노동운동과 좌파는 항시적 감시 대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노동자에게도 중요하다

선거를 앞두고 우파 정부가 벌인 불법 해킹 감시 공작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기성 정치권이나 국가기관 내 정적들부터 노동운동까지 다양했을 것이다.

정치적 반대파 개인들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 조건에서는 정권과 기성 체제에 비판적인 의견의 형성, 확산 등을 통제하고, 협박과 분열 시도를 통해 정치적 반대파를 와해시키는 공작의 1단계 조처다. 설사 들켜더라도, 감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체제 비판적인 의견들의 소통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당연히 피억압자들의 연대와 단결에도 해를 끼친다.

한편, 지배계급 내 정적들은 상대적

으로 이런 감시 공작을 더 잘 알고,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를 피할 수단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기관의 전방위적 감시 공작으로 진정 위협 받는 것은 경제 위기 시대에 정권의 강력한 반대파(야당) 구실을 해 온 노동자·민중 운동과 그 운동에 참여하는 개인들이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야말로 우파 정부로서 경제 위기를 노동계급에게 떠넘기려고 온갖 수작을 벌이고, 이를 위해 민주적 권리를 후퇴시키려고 노골적으로 몸부림쳐 온 정권 아닌가. 그러니 한국 국가기관들 중에 국정원 말고도 해킹팀에 관련 기술 구매를 의뢰한 곳들이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지도 않다.

따라서 조직 노동운동이 자신들의 투쟁 의제에 이 문제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정원, 나나테크, 전현직 국정원장은 물론이고 이명박과 박근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야 한다.

친정부 언론들은 이 사건을 잘 다루려 하지 않는다. 심지어 7월 16일 대법원은 이 공작의 주범 중 하나인 원세훈의 2012년 대선 개입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뒤집었다(파기환송).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다.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등 공안 통치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 박근혜 정부에게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다.

‘해외 첩보’가 아니라 ‘내부의 적’ 감시가 그들의 진짜 목적

2013년에 ‘국경없는 기자회’는 독재 정권에 감시 기술을 판매하는 “인터넷의 적 기업들”을 발표하 바 있다. 감마(영국), 트레비코르(독일), 아메시스(프랑스), 블루 코트(미국) 등과 함께 5대 적대 기업으로 꼽힌 것이 국정원이 거래한 ‘해킹팀’이다.

당시 외신을 인용해 보도한 한 매체는 ‘해킹팀’이 “원격으로 PC에 있는 마이크로폰과 카메라 등을 작동시켜 전 세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지디넷코리아〉)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해킹팀’에게서 구입한 것도 바로 이 해킹 기술(RCS)이다.

자본주의의 첨단화가 의미하는 바는, 이런 민간인 감시·통제 기술도 상품화해 상업 거래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객은 누구일까? 이번에 폭로된 ‘해킹팀’의 거래 목록에는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의 정보기관은 물론 사우디 아라비아, 바레인 등 독재 국가들의 정보기관도 포함되어 있다. 표적이 된 개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기술이, 그것도 국가기관들을 고객으로 공공연히 거래되고 독재 정권에게까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국가기관들의 해킹 기

술 구매가 한국 국정원의 해명처럼 해외 첩보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서일까?

오히려 이런 기술을 해외에서 몰래 구매하는 것은 구매 목적이 해외 첩보가 아니라는 방증일 수 있다. 해외에서 이런 기술을 거래하는 것은 각국 기관들이 상대 국가기관들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해킹 정보가 ‘해킹팀’으로 역유출됐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다.

“중요 고객”

‘해킹팀’은 “SKA(국정원의 위장 명칭)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

요한 고객”(〈동아일보〉)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고 한다. 국내법이 금지한 이런 기술을 법과 질서를 지킨다는 국정원이 나서서 거래한 것만 봐도 국정원 같은 기관들의 목적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보여 준다. 해외 첩보를 위한 것이란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 이유다.

국정원의 역사가 그렇다. 국정원은 옛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이름만 바꾼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5·16 쿠데타 이후 박정희의 친위부대로서 강탈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만들고 부정선거, 유신헌법, 감시·고문을 저

질렀다.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전두환이 대통령이 된 뒤 간판을 바꿔 단 안전기획부도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참여자들을 납치·고문·살해했다.

물론 지금은 노동운동의 진전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확대돼서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거나 고문, 납치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주된 업무는 정권과 기성 체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이라는 점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한 기층의 저항이 드세질수록 이런 공작은 더 강화될 것이다.